

GSEF 2018 빌바오 포럼 &
스페인·프랑스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 지역재생 · 금융 · 돌봄 · 노동 · 거버넌스

2018. 1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GSEF 빌바오 포럼 &
스페인·프랑스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지역재생·금융·돌봄·노동 거버넌스

2018. 1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특별시

2018 GSEF 발바오 포럼 & 스페인-프랑스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18. 12
발행인	이은애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전화	02-35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sehub.net
표지디자인	이은한 청년혁신활동가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연수 개요	5
II	2018 GSEF 빌바오 포럼	9
III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13
	1.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사회혁신 지원기관(Barcelona Activa, Barcola)	14
	2. 시민 주도 유희공간 활용, 협동조합 지원기관, 코오폴리스(Coopolis)	20
IV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25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역사와 현황 - 티에리 장떼	25
	1.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사회혁신 지원기관(Avise)	30
	2. 시 유희공간 활용한 공유허브, 레그랑브와장 (Les grands Voisins)	34
	3. 프랑스 사회연대금융, 프랑스 액티브(France Active)	38
	4.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CG Scop)	47
	5. 노동통합기업연합회(Coorace)	53
	6. 프랑스 대인·근린서비스기업 연합회(Fedesap)	57
	7.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와 파리10구 지역관리기업	65
	8. 렌 광역시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과 지역생태계(Rennes Metropole)	70
	9.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RTES)	74
V	참고	77

I

연수 개요

2018년 GSEF 빌바오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스페인·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¹⁾ 정책 및 노동·금융·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향후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반영하고 사업화 토대 마련

□ 목적

- GSEF 2018 빌바오 총회 참석 및 스페인·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현장 기관 방문
- 서울의 사회적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연수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및 우수성 확산, 국제네트워크 강화
- 정책과 사례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

□ 기간: 2018. 9. 29.(토) ~ 10. 14.(일), (14박 15일)

□ 연수지역: 스페인(빌바오, 바르셀로나)·프랑스(파리, 렌, 릴)

○ 주요 방문기관

분야	스페인	프랑스
공공정책·금융	• Barcelona city 바르셀로나 시 • Barcelona Activa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지원기관 • BarCola 바르셀로나 사회혁신 플랫폼	• AVISE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지원기관 • France Active 사회적금융 기관 • Rennes Metropole 렌 광역시 • Lille 릴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관리·돌봄	• Coopolis 시민자산화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지원기관	• Les Grands Voisins(공유허브) • CNLRQ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 • FEDESAP 대인·근린서비스기업 연합회
일자리·청년 등		• CG Scop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 • COORACE 노동통합기업연합회

※ 강연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역사와 현황”(티에리 장테,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 회장)

1)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보다는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함.

□ 연수 명단

○ 2018년 전략기획연수단 및 GSEF 포럼 참석자 총 29명

번호	성명	소속/지위	비 고
1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략기획 연수단 및 GSEF 포럼 참석자
2	신재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장	
3	인성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4	강명신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공동대표	
5	김연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6	민 영	서울지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7	박성민	(주)헬스브릿지 대표이사	
8	이원재	재단법인 LAB2050 대표	
9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10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1	정찬희	서울광역자활센터 센터장	
12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13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14	한수정	(재)아름다운커피 사무총장	
15	김유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16	로렌스곽	GSEF 사무국장	
17	고동현	재단법인 LAB2050 연구원	
18	류은화	행복나래 SE혁신센터 팀장	
19	이미영	페어트레이트코리아 대표이사	
20	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21	최선희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간사	
22	김태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센터장	
23	김충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24	김태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임	
25	조미애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정책보좌관	
26	이진숙	수원시 사회적경제팀장	
27	이선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임	
28	안무엽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9	박경숙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연수 전체일정

일 자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비고
9.29(토) ~ 9.30(일)	출국	•인천-파리(14:40-19:35, AF261) •파리-빌바오(20:35-22:10, AF1376)	
	GSEF사전학습 네트워크	•GSEF 총회 사전 학습 •몬드라곤 교육협동조합(TZBZ) 네트워크	
10.1(월)~ 10.3(수)	GSEF2018 포럼	•GSEF 총회 및 세션별 워크숍 •몬드라곤 및 빌바오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방문	
10.4(목) ~ 10.5(금)	이동	빌바오-바르셀로나 이동(18:35-19:45, VY1423)	
	바르셀로나 기관방문	•바르셀로나 시, 바르셀로나 악티바, 바르콜라(BarCola) •코오폴리스(Coopolis)	
10.6(토) ~ 10.7(일)	바르셀로나 현장탐방	•바르셀로나 생활상권 활성화 사례	
	이동	•바르셀로나-파리 이동(09:25-11:15, VY8008)	
10.8(월)	파리 기관방문	•티에리-장테(Thierry Jeantet) 간담회 *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FIESS) 회장	
		•아비즈(AVISE) 사회연대경제 활동 개발 지원 조직	
10.9(화)		•레그랑브와장(Les Grands Voisins)	
		•프랑스 악티브(France Active)	
10.10(수)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CG Scop)	
		•노동통합기업연합회(COORACE)	
10.11(목)	렌 광역시 방문	•렌 광역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및 현장 탐방	
10.12(금)	파리 기관방문	•FEDESAP(대인•근린서비스기업 연합회)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	
	릴시 방문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및 릴 광역시 도 시재생 현장탐방	
10.13(토) ~ 10.14(일)	도착	•파리-인천(13:10-07:10, AF264)	

II

2018 GSEF 빌바오 포럼

□ 2018 GSEF 포럼 개요

○ 개 요

- 참석규모: 국내외 지방정부 및 사회적경제 단체 등 관계자 약 1,700명
- 주 제: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 ※ 해외도시 시장단(빌바오, 몬드라곤,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가띠노, 캄팔라, 프라이아, 바마코, 릴, 타이페이, 몬트리올, 뉴욕 등), 스페인 관계자(정부대표단, 빌바오시장, 몬드라곤그룹회장 등), 국제기구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EC, UCLG, ICA 등), 서울시(서울시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구청장,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연구자 등) 참석

○ 세부 일정

■ 10월 1일(월)

세션	장소	세션명
1	A1	1.1 경제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와 정책입안자의 공동노력
	A2	1.2 일자리 및 재생산적 일자리
	A3	1.3 사회적경제 단체 간 협력 경험
	A4	1.4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E	1.5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2	A1	2.1 몬드라곤 이야기
	A2	2.1 협력의 사회적경제와 시민권: 변화의 이양
	A3	2.3 이니셔티브 창출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A4	2.4 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영어)
	E	2.5 GSEF 전체세션- 청년과 사회적경제
3	A1	3.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A2	3.2 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A3	3.3 이니셔티브 생성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A4	3.4 일자리와 고용의 미래(ILO)

■ 10월 2일(화)

세션	장소	세션명
4	A1	4.1 사회 & 노동 통합
	A2	4.2 기업가정신과 사회 혁신
	A3	4.3 사회적가치의 경제적 가치화(화폐화)
	A4	4.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사회적경제
	E	4.5 GSEF 전체 세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통합적 이니셔티브

세션	장소	세션명
5	A1	5.1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 경험
	A2	5.2 사회적경제를 통한 비즈니스 변화
	A3	5.3 공공구매와 사회적조향
	A4	5.4 사회적경제와 분야별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사례 중심
	E	5.6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연결고리 만들기
6	A1	6.1 사회 & 노동 통합
	A2	6.2 바스크 지방 사회적경제 단체의 거버넌스 모델 경험
	A3	6.3 사회혁신의 생태계
	A4	6.4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경제(RIPESS)
	E	6.5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협력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7	A1	7.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A2	7.2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A3	7.3 분쟁 후 회복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 기여
	A4	7.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경제
8	A1	8.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A2	8.2 사회적 책임 지역
	A3	8.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경제
	A4	8.4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생성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9	A1	9.1 민관협력전략
	A2	9.2 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
	A3	9.3 사회혁신의 생태계
	A4	9.4 사회적경제와 지역

■ 현장방문 일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방문 기관
10월 3일(수), 오후	Community and social initiative itinerary 커뮤니티/소셜이니셔티브	• Agintzari • Bidegintza • Colaborabora
	Consumers itinerary (소비자단체)	• Eroski • Goiener • Labore
	Financial itinerary (금융)	• Laboral Kutxa • Elkargi S.G.R. • Fiare • Koop57 • Lanpar
	Industrial itinerary1 (산업1)	• Fagor Arrasate • FMD Carbide • Lantegi Batuak Foundation
	Industrial itinerary2 (산업 2)	• Matrici • IZAR Cutting Tools, SAL • KL katealegaia
	Visit to BBF	• BBF - BILBAO BERRIKUNTZA FAKTORIA
	Support and care for elderly itinerary (고령자 지원 및 돌봄서비스)	• Grupo Servicios Sociales Integrados • Auzolagun • Bizitzen Fundazioa • GSR • Zaintzalan
10월 4일(목), 08:30~14:00	MONDRAGON Experience 몬드라곤 방문	

□ GSEF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빌바오에서 개최된 제4차 글로벌사회적경제 포럼(Global Social Economy Forum)은 84개국에서 온 1,700명 이상 참가
-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포럼이었음
- 사회적경제가 태동한 유럽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빌바오 포럼의 성과는 사회적경제가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연대와 혁신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적경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경제, 모두와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선포
- GSEF의 향후 계획
 - 2020년 GSEF포럼은 중남미의 멕시코시티가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며 공동의장 도시가 되었음.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오랜 역사와 문화로 자리잡은 유럽과 달리 지역과 사회계층 간의 빈부격차 해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조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대륙별 부의장 제도를 도입하여, 유럽은 빌바오시, 북미는 몬트리올시와 샹티에(퀘벡 사회적 경제협의체), 아프리카는 말리 바마코시가 선출됨. 대륙별 GSEF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 시사점

- 글로벌 경제침체와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지방정부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경제 조직 및 국제적 연대 기구들의 구체적 활동 성과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GSEF 포럼 참여가 일회적인 행사 참가로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문제와 이슈에 대응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이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확산, 사회적임팩트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 간, 도시 간, 사회적경제 조직 간 지속적인 교류가 더욱 중요해짐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양극화·청년실업 등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전략기획, 사업모델 및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민관 협치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 기반 구체적 활동 및 사업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Ⅲ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 스페인 사회연대경제 현황

- 스페인 GDP의 10%, 고용의 12.5% 비중 차지
- 총 43,400개의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2,231,607명에게 일자리 제공
 - 지난 8년간 29,000개의 신규 사회연대경제 기업 창업, 19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사회연대경제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이 노동자소유기업(Sociedad Laboral)임
 - ※ 노동자소유기업: 1986년 4월25일 제정된 샬(Sociedades Anónimas Laborales)법에 근거해 노동자 소유지분이 51% 이상인 기업 중에 고용사회안전보장부에 노동자소유기업(S.A.L.)으로 등록한 기업임. 노동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 형태를 취함
- 스페인의 사회연대경제 전략 2017-2020을 수립하여 사회연대경제 지원 및 인식 제고에 노력
 - 사회통합, 스페인 경제회복, 기업망 구축 및 양질의 고용 창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기업가정신의 진작(특히 청년층 기업가정신 함양)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제도 포함

□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현황

- 4,700여 개의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활동 중임.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그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보면, 전체 고용의 8%(53,000여 개의 상근직)의 비중을 차지
 - ※ NPO, 노동자소유기업, 노동자협동조합(1,197개), 협동조합(861개), 창업팀(260개) 등으로 구성
-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기업 총 매출은 37억 유로(4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7% 이상 차지

□ 바르셀로나 기관 방문

○ 세부 일정

일 자	시간	방문기관	비고
10.5 (금)	10:00~14:00	바르셀로나 시, 바르셀로나 악티바, 바르콜라 - 사회연대경제 정책, 사회연대경제 지원, 사회혁신 플랫폼	
	16:00~18:00	코오폴리스 - 시 유희부지를 활용한 시민자산화 활동 - 협동조합 창업 및 고용 창출 지원 - 시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프로젝트 추진	

기관 개요

- 1986년에 설립된 바르셀로나 시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5년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 창업, 기존 사회연대경제 기업 강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원 계획 2016~2019」를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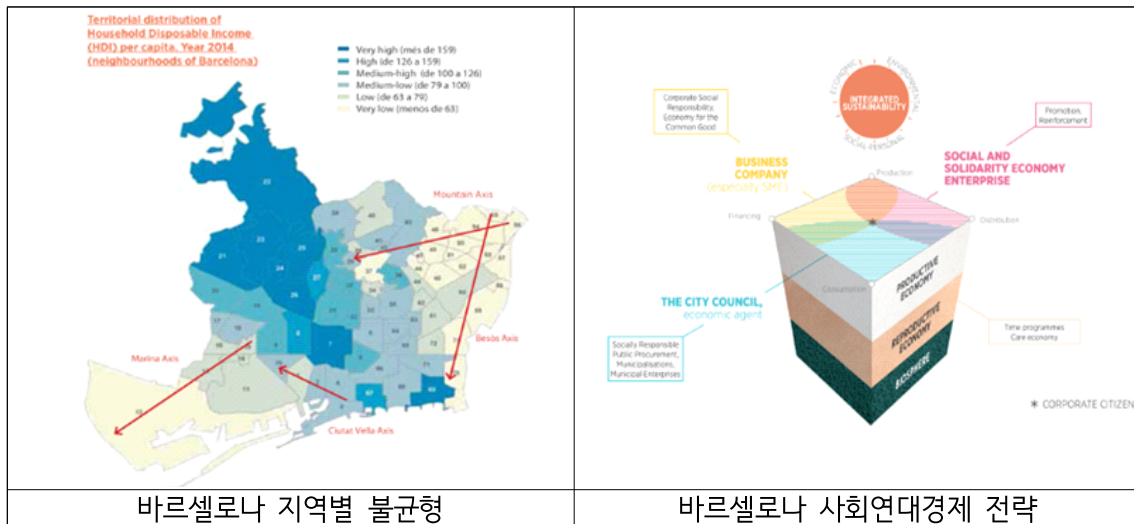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 2015년 이전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공공정책이 없었으나, 2015년 아다콜라우 현 시장 당선 후,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함
- 바르셀로나에 자생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많지만, 이를 더욱 촉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존 자본주의 경제모델이 야기하는 폐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바르셀로나 시 역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
- 바르셀로나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모델과 사회연대경제 모델이 공존·상생하는 다원적 경제모델에서 찾고 있음. 이러한 다원적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시의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을 수립·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 및 의지를 분명히 함
- 아다콜라우 시장은 당선 후 사회연대경제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연대경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바르셀로나 시 산하 중소기업지원기관인 바르셀로나 악티바 내에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를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액션플랜을 실행함
-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은 기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회연대경제 창업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함. 특히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설립한 사회연대경제 또는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은 선출직 시장의 정책적 의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성의 위험이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 활동을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제도, 인프라 등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전략

- 바르셀로나 전체 균형발전계획과 맞물려 지구단위 개발 계획 수립함. 60개 전략과 240개 실행 방안 마련(2016~2021년)
- 특히 소득과 고용률 기준으로 6개 지구 차등 정책 수립함. 바르셀로나의 경제규모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지만, 바르셀로나 시 10개 지구(73개동) 중 6개 지구(52개동)의 임금은 평균임금 이하인 반면에 나머지 4개 지구(21개동)만이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낙후된 6개 지구가 각각 자체적으로 성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렇게 수립된 지구별 성장 계획에 맞춰 차별화된 사회연대경제 지원 전략을 추진함
 - 산업지구의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관광지구의 경우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
-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시 및 지구의 관련 부서, 지원기관(악티바), 기업인, 시민,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별 규모와 경제상황에 적합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지구마다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 후 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활성화

- 바르셀로나 시의 또 다른 사회연대경제 지원정책 중 하나는 윤리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임
 - 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금융 접근성 강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함
 -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② 윤리적 은행에 대한 기준을 수립·인증을 지원: 자산, 예치금, 대출제도 등

-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 시 자산의 20%(최대 50만 유로)를 윤리적 은행에 예치
- 윤리적 은행에 대한 관리는 민간 차원에서 구성한 FETS 협회에서 수행
 - ※ FETS(카탈루냐 지방의 윤리적 은행들이 모여 만든 협회) ⇒ 윤리적금융 관련 다양한 자료 보유, 윤리적 보험(ETSHI) 상품 개발, 국제 포럼 개최, 모바일 앱(윤리적 금융 제도 및 이용 정보 포함) 개발 중
- 또한 윤리적 은행인 트리오도스 은행과 협약을 통해 주택 모기지 대출(750만 유로 정도) 지원

③ 새로운 금융문화 정착을 위해 도구 및 홍보 지원: 악티바, 윤리적 금융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출과 더불어 신규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컨설팅(홍보, 교육, 재무계획서 분석 등) 동반 지원

- 바르셀로나 시에서 협약을 맺은 Fiare라는 금융기관과 Coop57이라는 금융지원서비스협동조합에게 각 10만 유로씩의 기금을 지원함. 이 두 기관은 기금을 토대로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리스크가 큰 사회연대경제 조직(대부분 신규 창업기업)에게 대출 실행. 2016년부터 현재까지 13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게 총 80만 유로를 대출하였고 이를 통해 총 80명의 일자리 창출
- 또한 바르셀로나 시가 대손충당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손충당금(2만유로)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④ 윤리적 은행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 지원: 시민들이 윤리적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⑤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 윤리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산 노력 가시화

- 시의 공공조달에 사회책임요소를 도입(책임 소비와 사회적·윤리적 대출이 진행되도록 조항 삽입)
 - ※ 사회적책임이 더 높은 금융기관에 추가 점수 부여, 사회분야에 더 많은 활동을 한 기관에 가산점 부여, 주민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등의 요소도 추가하여 조달 진행

	 
<윤리적은행 인증마크>	<사회연대경제 대출 금융기관>

이노바(바르셀로나 사회경제 혁신센터)

○ 악티바와 더불어 바르셀로나 시 산하기관으로 2018년 12월 경 개관 예정

-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사회연대경제 지원에 특화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액션플랜에 프로젝트로 포함됨

○ 시민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다양한 사업 지원을 목적

으로 추진

① 정보 제공

-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에 관한 서비스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안내, 지역의 교육센터에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바르셀로나 시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활동들을 수집, 홍보 활동

② 공간 지원

- 창업 지원 공간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 간 교류 협력 기반 공동프로젝트도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3년까지 입주가능
※ 이노바 공간은 1,000㎡ 면적의 건물, 바르셀로나 대학과 일부 공간을 공동 사용

③ 조사 연구

- 연구와 사업 관련, 대학과 교류를 통해 지식 전수, 방법론 및 모델 이전가능, 필요한 자료 공급, 연구와 실습 교육 등이 함께 이뤄짐

④ 국제화 : 프로젝트 교환 및 정보교류, 국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고 네트워크 형성

협력적 공유경제(share.barcelona 참고)

- 공유기업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플랫폼 기업(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협력적 공유경제 기업을 구분하여 정책적 지원
 - 3가지 형태의 공유플랫폼으로 구분:
 - i) 디지털커먼즈에서 형성된 플랫폼: 열린 지식, 열린 기술 등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예 : 위키 피디아 등)
 - ii) 신자유주의적 플랫폼경제: 신자유주의적이고 부를 창출하지만 사회적 임팩트는 형성하지 않는 닫힌 기술과 지식으로 파괴적인 사회 영향력(예: 우버, 에어비앤비 등)
 - iii) 협력적 공유경제(플랫폼 협동조합): 21세기 기술과 협동조합 모델의 결합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와 긍정적 사회영향력(예: 섬에너지 플랫폼 등)
- 공유기업의 창업(자유로운 지식, 열린 기술 등 사회적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전문가 팀 지원, 세미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 클라우드 펀딩(펀딩 플랫폼 활용 자원 조달 및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공유기업 예시
 - ① Som Mobilitat: 이웃과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비영리사업으로 전기운송수단 장려를 위한 지원 병행
 - ② Barri Upcycling: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하는 서비스이며, 바르셀로나 내에서 소규모의 자원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사회연대경제 지원 계획 2016~2019」에는 협력적 공유경제에 기반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 양성 교육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인 ‘라 꼬무니피카도라(La comunicadora)’를 진행

라 꼬무니피카도라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① 공동의 이익에 기여
- ② 생성된 지식을 공유하며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 ③ 디지털 도구를 주로 활용하며 협력적 생산 체계를 갖춘 사업 모델
- ④ 사업모델 만들기, 공동생산, 해당 사업 분야의 도구와 커뮤니티,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자금 조달 등의 영역에서 훈련 제공
- ⑤ 검증된 인력이 프로젝트별로 개인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프로젝트, 다양한 사람, 작업 공유 환경 제공

바르콜라, 사회혁신플랫폼

- 시민사회가 혁신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은 국가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
 -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은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가치 창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정부나 기업 주도의 성장 모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들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실현
- 바르콜라(Barcola)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협력적 공유경제 정책 실현 중
 - 바르셀로나 시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바르셀로나 악티바, 바르콜라 코디네이터와 같은 공공기관과 다수의 민간기업 및 단체로 기구 구성
 - ※ 바르셀로나 팍랩, 위쉐어, 쉐어링엑셀러레이터, 아이디어스 포 체인지, 위키미디어, 정보텔레커뮤니케이션, 아미칼 위키미디어, 고테오, 디지털 DIY 프로젝트, 팝아카데미, EADA 비즈니스스쿨 등 다수의 민간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바르콜라의 목표
 - 바르셀로나 협력적 공유경제 내 커먼즈 지향 모델의 상황 분석 및 평가
 - 바르셀로나 협력적 공유경제 사례와 커먼즈 지향 모델 연결
 - 이 분야에서 공공정책 기획을 위한 권고안 작성
 - 사회연대경제와 커먼즈 지향 생산 간의 소통 강화
- 바르콜라의 방법론: 전문가 팀 중심 운영, 워크숍 세미나, 온라인 기반 서비스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심, 바르셀로나 공공정책 정교화를 위한 공동 생산 작업
- 협력적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공유도시 서밋’ 개최

Goteo 사례

- 2011년에 스페인에서 시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단체로 크라우드펀딩이 진정한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 그간의 크라우드펀딩은 진정한 협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단순히 돈을 투자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을 응원하는 수동적 참여를 넘어 프로젝트 실행에 직접 관여하는 적극적 참여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
-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공공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자원 조달 방법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일반인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가치 및 오픈 코드 창출 등에 기여하는 창조적, 혁신적 시도들에 대한 자원 조달 및 비금전적 개발을 지원
- 일평균 9,000명이 방문, 개설 프로젝트는 100개를 넘으며 스마트 시티즌 키트 등 성공 사례
-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작은 이벤트에서부터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펀딩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학습, 협업, 커뮤니티 구축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기관 개요

- 2009년 카탈로니아 주에서 정부의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 서비스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이 진행. 당시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공동체 회복, 사회경제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바뜨요 옛 방직공장(44,000m²) 사용계획을 바르셀로나 시에 제안
- 민관협력 기반 지역재생 과정에서 설립된 코오폴리스(Coopolis)는 협동조합 창립과 기존 협동조합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시민단체들의 프로젝트 신생·기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활용
 - 시민단체, 협동조합, 지역 단체 등을 지원하는 카탈로니아 협동조합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활동, 고용 창출 및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상호협력(Inter-cooperation)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실험실로 기능하고 있음

주요 내용

산업단지 이전으로 인한 유희부지 활용

- 초기에는 바티우 가문의 사유지였다가 정부가 섬유산업단지(옛 방직공장 이름이 깎 바뜨요)로 육성하면서 국공유지가 됨. 섬유공장이 아시아, 중남미로 이전한 후 공장부지 사용을 둘러싼 긴박한 싸움이 시작됨
- 2008년~2011년 주민단체인 ‘이웃주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많은 캠페인이 이뤄졌고 산업단지 사용처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낙후 정도가 더욱 심화되기에 2016년 전까지 용도를 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6월 바르셀로나 인근의 라 보르데타(La Bordeta) 주민들이 깎 바뜨요 방직공장의 11구역을 점유, 자치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함



식락한
칸바뜨요
공장부지

주민단체들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관리

-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깐 바뜨요의 4구역으로 이전해오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함. 2013년 상반기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바르셀로나 시와 협상을 계속 하여 그 해 가을 부지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어냄(<https://bcn.coop/historia/> 참조)
- 2015년 새 시장이 선출된 후 「시민자산법」이 제정돼 주민공동체 활동과 공간 사용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75~99년 기간 동안 공간을 임대하기로 함
 - ※ 연대경제네트워크의 활동

- 2003년에 탄생한 연대경제네트워크(XES, Xarxa d' economia solidària)는 2010년에 산츠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0월 말 바르셀로나 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카탈로니아주 및 바르셀로나 시의 새로운 경제 이니셔티브 및 지역간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데 기여
- 2015년에 연대경제네트워크는 지역 수준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14가지 조치를 제안 : 그 중 하나가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개발하고, 활동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제안

- 2016년에는 카탈로니아 주에 코오폴리스와 같은 형태의 지원조직 14개를 더 설립·운영할 계획을 발표함

운영방식

- 시민주도성: 공간을 점유하는 과정으로 시작해서 시민단체, 주민조직이 주도하는 운영방식 강조
- 주정부와 시 자원의 결합: 운영 예산 중 75%는 카탈로니아 주정부에서 지원되며, 17~18%는 바르셀로나 시에서 지원함. 전체 예산의 92%가 주정부와 시 등 공공자원에 의존하고 있음
 - 1년차 지원(2016년 9월~2017 9월), 2년차 지원(2017년 9월~2018년 9월)이 이뤄졌으며 향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공유공간 조성 관련 시민 주도성이 크고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 중 92%가 주정부와 시 등 공공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의 관계에서 협동조합 설립 실적이나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속도를 앞서가는 행정의 결정 및 요구사항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 기능 및 활동

- 조사 활동, 교육 및 훈련, 워킹스페이스 & 인큐베이션,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추진, 협동조합 신설 및 발전, 사회연대경제 증진 등의 기능을 함
 - 주말마켓, 프로젝트별 맞춤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법적 형태가 없이 활동할 때 협동조합 형태 갖추도록 지원)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 방법론, 콘텐츠도 발굴 지원

- 돌봄, 문화, 소비, 플랫폼협동조합, 이민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 활동 진행
- ※ 특히 이 지역으로 전입해온 이민자들의 경우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웃 주민과 교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함.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협동조합들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함

구역 내 사회연대경제

- 현 16개의 공동공간이 활용되고 있고 400여 명이 일하고 있음
- 주민단체·입주 기업들의 자치 프로젝트(활동 및 사업)에 기반한 순환경제 시스템이 구축됨
 - 협동조합주택, 인쇄소, 목공소, 텃밭, 자전거 정비소, 서커스 연습 공간, 체육시설(농구장, 축구장 등), 수제맥주 제작 공간, 바, 사회운동 관련 문서보관실, 어린이 활동 지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월세는 화폐로 지급하기보다는 구역 안에서 순환되는 비화폐적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 예를 들어 목공소는 목공교육이나 기술전수, 인쇄소는 인쇄물 제작 등의 활동으로 지불
 - 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와 운영의 자치성도 강조함. 구성원들이 몇 시에 열지, 닫을 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함. 프로젝트 자체가 다른 경제 방식이며, 사회의 필요이기에 별개의 사회 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코오폴리스의 사업 성과

- 코오폴리스가 칸바뜨요의 공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바르셀로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실업률이 30% 이상)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경제운동임
- 지역 및 주민단체들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상호 협력하며 지역 발전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지향함
-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시민들의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발전시키고자 함. 바르셀로나 시와의 협약에 따라 칸바뜨요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코오폴리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생 프로젝트를 지원함
 - 코오폴리스는 먼저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며 경험을 축적해왔음
- 그간 코오폴리스는 2,500명의 참여자, 185개의 프로젝트, 130개의 일자리, 40개의 협동조합 창립 등 사회적 성과 창출
 - 칸바뜨요 지역의 12,000명 인구 중에서 2,500명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200명 정도임.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기존 인구가 노후화되고 나중에 유입된 청년들이 있는 등 다양해진 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참여 주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지하는 과제가 있음



IV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현황

- 2016년 기준, 프랑스에는 약 202,000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있고, 2,409,000명이 사회연대경제에 종사하고 있음(임금총액으로 하면 570억 유로)
- 비영리민간단체(associations),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등 사회연대경제에서의 고용이 민간 고용의 12.8% 차지(8명 중의 1명 꼴)
 - 사회연대경제 종사자 수는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6% 증가한 반면에 동 기간에 전체 민간 고용(사회연대경제 제외)은 단지 1% 증가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합계
기업(단체)(수)	166,872	26,182	7,500	1,536	202,090
비중(%)	82.5	13.0	3.7	0.8	100
종사자수(천명)	1,853	314	157	85	2,409
비중(%)	77	13	6.5	3.5	100
임금총액(백만유로)	39,140	10,083	5,198	2,359	56,780
비중(%)	68.8	17.8	9.2	4.2	100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역사와 현황

- 티에리 장테(사회연대경제 기업가 국제포럼 회장)의 주제 발표

주요 내용 ²⁾

19세기부터 시작된 사회연대경제 흐름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890년대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 1848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사회운동, 노동운동의 결사체들이 많이 생겼음. 19세기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샤를르 지드. 그 당시에는 넓은 의미로 정의를 했으며, 각 지역의 지방정부까지 포괄하여 사용
- 초창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한 가지 형태로 정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함. 농업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태동하기 시작
 - 이렇게 태동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는 크게 노동자 중심 조직과 소비자 중심 조직, 2가지로 분

2) 이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기업가 국제포럼 회장인 티에리 장테가 발표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역사와 현황”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2018.10.8. 간담회 중)

류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성장을 했는데, 특히 초기에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계몽주의자의 영향이 컸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진보적인 정당들의 영향이 컸음
- 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인 1947년 협동조합 공통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반면에,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공제조합, 상호보험회사들이 타격을 입고 국민의료보험을 보완하는 재구조화되기 시작함
-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이 시기에 많이 생겨났으나, 1950~70년대는 사회연대경제 운동이 정치운동과 결합하지 않고 민간에서 조용히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였음

1970년대 재등장한 사회적경제와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 1970년대 경제위기의 시작과 함께 새롭게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동조합을 연결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짐. 많은 공제조합(상호보험회사)과 재단들이 참여했음. 전국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75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서 정부와도 대화협상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가 가시화되었음
- 미테랑 대통령 집권 시기에 처음 사회적경제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미셸로카르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 간 연계부서가 설치됨. 이 부서는 사회당 집권 때 만들어졌지만 이후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도 유지되었음
-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 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역단위에서 수많은 연대경제(지역문제해결, 노동통합 등 사회적 목적 활동 수행)조직들이 등장하였음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와 연대경제(지역관리기업, 노동통합형 기업 등), 일반 기업(사회적 목적과 원칙에 따른 기업 운영)들을 사회연대경제로 통합, 정의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정책·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4년에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됨
- 마크롱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생태 전환부'에 속해 있고, 사회연대경제 고등판무관이 각 부처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현재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수는 16만 7천개이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30만이 고용되어 있음. 민간 영역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공공 영역까지 포괄할 경우에는 전체 고용의 11%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00년 초반까지는 국가경제의 6%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11% 정도 규모. 프랑스 국민 60%의 예금이 협동조합 은행에 있고, 자동차 보험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전 국민의 60%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는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이후의 변화

- 2014년 통과된 사회연대경제법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처음으로 하나로 묶어주며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데 의의가 있음. 이전과 달리 사회적기업도 범주화되었음
- 사회연대경제법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사회연대경제 부처 간 위원회의 다수의 제안이 법에 반영되었음. 전국 단위 대표기관으로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회의소’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대표적인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민간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가 공식화되었음
 -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는 지역 단위로 존재하며 전국 네트워크로도 활동하고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① 지역의 이해 대변, ② 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③ 사회연대경제기업 종사자 교육 추진, ④ 사회연대경제 통계 조사 및 관리, ⑤ 사회연대경제 정보 관리, ⑥ 국제협력 및 국제프로젝트 관리임
-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와 협상 외에도 각 영역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생태계를 조밀하게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과 학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은행, 상호보협회사 등 규모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새로운 스타트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을 모색 중
-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정책적, 금융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주도의 사회연대경제 투자은행 등이 이미 존재해왔음. 민간의 자생적인 흐름 못지않게 정부의 지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짐
 - 마크롱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11월, 사회연대경제의 달을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함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과제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분야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임.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이미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민간의 협력도 더 필요한 상황
 - 특히 유럽의 특성상 국제연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통의 도구 및 교육도 필요함
- 지금까지 협동조합, 민간단체(Association)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특히 금융 관련 절차는 많이 복잡하여 통합 필요
- 또한 프랑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 노력도 필요하며,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중심이 되어 시장경제의 재편이 필요함



□ 프랑스 파리 기관 방문

○ 세부 일정

일 자	시간	방문장소 및 주요내용	비고
10.8 (월)	10:00~13:00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와 현재 : 티에리 장테(Thierry Jeantet) 간담회	
	14:00~17:00	아비즈(AVISE) - 노동통합기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혁신 지원기관	https://www.avise.org/
10.9 (화)	10:00~13:00	레그랑브와장(Les Grands Voisins) - 파리 14구 옛 생뱅상드폴 국립병원 부지에 조성된 공유허브로 작업장, 식당, 사무실, 숙소 등 입주	https://lesgrandsvoisins.org/
	14:00~17:00	프랑스 액티브(France Active) - 사회연대경제 투·융자, 연대급여저축펀드, 사회연대 경제기업 보증 지원 등	https://www.franceactive.org/
10.10 (수)	10:00~13:00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CG Scop) - 노동자협동조합, 공익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연합회 사업 현황	www.les-scop.coop
	14:00~17:00	노동통합기업연합회(COORACE)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통합 기업 및 일자리 창출 현황	www.coorace.org/
10.11 (목)	08:00~20:00	렌 광역시 + 렌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 광역 단위 사회연대경제 공공정책 및 지역 생태계 - 렌시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참가	
10.12 (금)	10:00~12:00	대인·근린서비스기업 연합회(FEDESAP) - 노인·아동, 가사 등 재가돌봄 분야 서비스 지원	www.fedesap.org
	14:00~18:00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파리 10구 지역 관리기업 - 지역개발 및 관리를 통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주거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형연대기업	www.regiedequartier.org

기관 개요

- 1901년 비영리민간단체법에 근거해 2002년에 설립된 전국 단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지원기관(Avise: Agence de Valorisation des Initiatives Socio-Economiques)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업, 사회적기업, 노동통합기업, 사회혁신(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조직, 비즈니스 혁신 방법론과 솔루션 제안 관점),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보급 등 5대 분야 미션 지원
- 예금공탁금고³⁾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공동 출연
 - 참여기관: 협동조합은행, 저축은행(Groupe BPCE로 통합), 전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CG Scop), 전국공제조합연합회(FNMF), 비영리민간단체연합(Le Mouvement Associatif), 라폰다 비영리민간단체연구소(LaFonda), 사회연대경제투자기관(IDES), 프랑스 악티브, 마시프 상호보험회사(건강, 주거, 자동차 등 보험), 마시프 재단 등
- 주요 사업
 - 유럽사회기금 사업(프로젝트)
 -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사업(비영리민간단체, 노동통합기업, 사회적목적협동조합 등이 지원 대상)
 - * 2016년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DLA) 사업으로 6,710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창업, 성장, 고용 창출 등을 지원하여 33,991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 2003년 이후 54,000개의 조직이 지원을 받아 660,000명의 고용 안정성과
 -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 지원사업
 - 2,000여 개의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자본화 지원(1억 유로 규모)사업 연계
 - 전국시도지사협회(Régions de France)와 사업협력 추진
 -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보급
- 조직운영
 - 이사회는 22명으로 구성: 의장은 제롬 사디에(전 협동조합은행 부의장), 부의장은 제랄딘 라크르와(예금공탁금고의 사회통합과 경제국장), 이하 AVISE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표(19명), 직원 대표(1명), 사회적경제 전문가 대표(1명)로 구성
 - 현재 38명 근무(상근직)

3) 예금공탁금고(CDC)는 대표적인 프랑스 공공금융기관으로서 1816년 특수자금 관리, 사회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금융시스템 근대화 지원 등을 위하여 100% 정부 출자로 설립. 1980년대 중반부터 공익을 위한 업무 정책금융을 담당

○ 예산 운영

- 300만 유로의 예산 중 47%를 예금공탁금고, 37%는 유럽사회기금과 프랑스 정부 지원금, 다른 파트너기관(11%), 회비와 판매(5%)로 조달
- 지출의 대부분은 인건비(60%), 그 다음으로 구매·용역·특별자금지원(23%), 운영비(17%) 등 사용

주요 내용

사회연대조직의 성장과 발전 지원 위해 공동의 이해 촉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임무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다양한 수단(자원봉사, 대시민서비스)을 통해 진행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전과 지역에서의 사회혁신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 지역의 주체 발굴 및 지원, 인큐베이터 지원, 커버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솔루션 개발
- 지역주체와 지자체, 광역시와의 협력-사회연대경제가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
- 창업 이후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지원 전국적 프로그램(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 진행

지역동반지원 프로그램(DLA) 사업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DLA) 개요

- ① 여러 도시가 모인 데파르트망 단위(광역)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임명
- ②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조직들과 함께 전반적인 지역 시장조사 수행(경제모델, 경제적 어려움, 거버넌스 등)조사를 기반으로 동반프로그램 설계
- ③ 시장조사 이후 필요한 자원 동원 및 어떤 동반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에 맞는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일주일에 4일정도 지원받도록 연계(지역마다 다른 맞춤형 동반프로그램)
- ④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와 함께 최종 평가 수행
- ⑤ 아비즈는 설계·매칭·종합해서 전국적 통계화, 3년마다 사업설명회 수행, 지역에서 지역동반사업 단체가 코디네이터를 임명, 정부 재원 투입
(ex. 한 기업이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그 중 한명이 코디네이터로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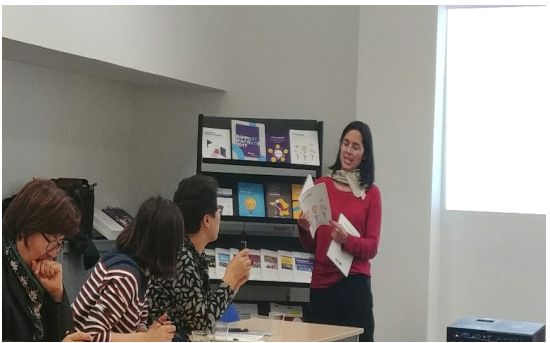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전문가와 함께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지원함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며, 실험 과정에 지역의 동반자(조직)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가용한 자원(사람, 조직)을 연계함
- 동반과정에서 촉진자 역할도 진행하는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 뿐 아니라 지역동반사업을 위한 촉진사업, 청년창업, 대시민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6,500개의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매년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에 참여(다른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120개 조직도 참여)

- 노동통합, 문화, 스포츠, 보건의료, 작은 비영리민간단체(협회) 등 집중 지원
- 지역동반지원프로그램의 단계별 성장지원 수행
- 지역동반지원 프로그램은 참가조직들의 평가가 매우 높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조직의 건강도에 대한 평가가 98%나 되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

사회적 임팩트 평가 및 보급

- 사회연대경제 조직(사회연대경제 기업,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동반자들, 금융지원기관도 포함)의 활동을 통해 진화하고 변화한 모든 관계자(내·외부)들의 영향을 사회적 임팩트로 평가함
 - 사회적 임팩트는 우리가 하는 일의 증명(지원기관, 투자자에 대한 증명,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함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기여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의 핫이슈로, 한때의 유행이 아닌 사회연대경제 진화의 한 과정이며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여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방식,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사회적 임팩트 평가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아비즈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함
 - 어떤 조직이든 사회적 영향 평가는 기본 흐름. 그 정의에 동의를 하면서 방법론에 대한 자료나 전문성(경험, 자산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평가자문기관도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임팩트 평가는 국제지원프로그램, 공공정책, 건강의료분야 등에서 많이 하고 있음. 거기에 영향 받아 독자적 방법론 개발 중임.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평가)방법론에도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조직에 따른 지원 전략은 고민 중(규모, 여력 등 고려)
- 아비즈의 4가지 주요 역할
 - ① 사회적 임팩트 평가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방법과 과정, 사례 공유 및 홍보(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다양한 임팩트 평가 방법 설명 및 제안)
 - ② 사회적 임팩트 평가 툴 제공: 워크숍, 아카데미, 인터넷을 통한 평가도구 제공(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 혼합한 독자적 방법론 제안)
 - ③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적 임팩트 평가를 위한 관리 및 모니터링(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사회에 기여한 결과 평가, 과학적 비교분석 연구 등)
 - ④ 사회적 임팩트 평가단, 금융지원 등 지지자, 싱크탱크 등 네트워크 구성
 - ※ 사회적 임팩트 평가는 별도의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아비즈는 평가수단 개발, 적용 담당)
- 임팩트 평가의 반영 여부
 -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단체가 임팩트 평가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
 - 민간투자기관은 기존의 영향평가(경제적 지표)에 사회적 영향을 혼합해 평가하는 추세이고, 공공기관은 무엇이 가장 잘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성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임팩트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를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
- 다양한 실험과 활동들을 종합하여 자원화

- 사업의 홍보 출판물, 교육자료
- 가이드북 제작: ① 임팩트 측정, ②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법적 자격 획득 방법, ③ 경영·소유의 형태 등
- 주거문제, 실버경제, 친환경먹을거리 등 주제별 책자 제작



기관 개요

- 레그랑브와장(Les grands Voisins)은 2015년 옛 생뱅상드폴 병원 부지를 점유한 이후 2023년 친환경지구 정비를 위한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공간임
 - 노숙인 임시숙소, 사회적주택(청장년층, 이민자 등 주거 취약층 거주), 기업 및 단체 사무실, 작업공간, 식당, 빵집, 재활용품 판매장 등이 입주해 있음
- 2018년 파리시로부터 2020년까지 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운영 연장 중(시즌2)
 - ※ 협력기관: 파리시청과 파리 14구 구청

주요 내용

역사

- 시즌 1(2015~2017), 국립병원의 폐쇄에 따른 유희부지 한시적 활용
 - 국립병원인 생뱅상드폴 병원이 2011년 폐쇄 된 후 일드프랑스 공공부동산 관리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현재는 파리 바티놀 개발공사(SPLA Paris Batignolles Aménagement)⁴⁾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
 - ※ 파리는 일반적으로 파리도시계획사무소(APUR, Atelier Parisien d'Urbanisme)가 파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파리시가 약 50% 지분을 가진 민관합동개발사(SEM:societe d'economie mixte)⁵⁾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 해당 부지는 생뱅상드폴 지구 재개발구역에 해당하나 2011년 폐쇄이후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유희부지로 방치(2023년부터 친환경지구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예정)
 - 사회적 배제에 맞서 대안운동을 주도해 온 오로라협회가 2015년부터 옛 병동을 활용해 노숙자, 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시 숙박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레그랑브와장(큰 이웃이라는 뜻)-공유 팩토리"라는 주제로 공간·시설 활용과 공공사업을 고려한 복합계획이 수립됨
- 시즌 2(2018~2020), 점유공간 축소되며 2년 사용 연장계약
 - 파리시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레그랑브와장 시즌2"가 시작됨

4) 파리 바티놀개발사는 2010년 파리시에 의해 설립된 지역개발공사(société publique locale)로 현재 파리&메트로폴 개발공사로 전환

5) 민관합동개발사(SEM :société d'économie mixte)는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임. 2002년 법에 근거해 공공이 최대 85%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 수거처리 공익적 목표로 행해지는 사업 시행

- 연장계약과 더불어 사용 공간이 축소되어, 최초에 600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250개 기관이 입주했으나, 현재는 90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90여 개 기관이 입주 가능함

시즌1 (2015~2017)	시즌2 (2018~2020)	
3.4 헥타르 (활동공간:8,800㎡, 주거공간:12,000㎡, 기타)	1 헥타르 (활동공간:3,500㎡, 주거공간:5,000㎡, 기타)	일부 구역에서는 친환경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 진행 예정

* 시즌2에는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면적 총 10만 9,691㎡)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용

역할

○ 공간 대여

-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의 50% 수준이어서 주거 취약층과 비영리단체들이 접근 가능함. 현재 수공업자, 문화예술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관이 입주해 활동 중
- 두 가지 기준으로 입주자 및 기관 선정: ① 레그랑브와장의 활동 방향 제안과 신청기관의 역할 제시, ② 입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 능력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난민과 노숙자에게 목욕과 식사, 숙박 등 휴식 공간 제공, 법률자문 및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필요시 의료 지원도 제공)

※ 지금 시설에서 1일 수용 가능 인원이 50명 정도이나 200여 명의 신청자가 대기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 파리 북쪽의 난민·이민자 숙소가 패쇄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레그랑브와장 숙소로 몰리는 중. 파리 여러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문화·놀이 공간

- 문화 프로그램 진행, 식당과 빵집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네트워킹을 모색함. 숙소뿐만 아니라 아틀리에, 공원,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카페의 경우(주말운영으로 월화는 휴일), “caffè sospeso”를 시행함

※ 익명의 자선 행위로 미리 지불한 커피 한 잔을 의미함. 한 사람이 커피 두 잔의 가격을 지불하고 한 잔만 소비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sospeso 있는지 여부를 물어 무료로 커피를 마시는 컨셉

운영 기관

① 오로라(Association Aurore): 총괄 관리

- 1871년에 설립된 협회로 전국 88개 도시에서 활동 중. 숙소, 치료, 노동통합의 세 가지 사명을 중심으로 학대 및 고용 피해와 장애, 중독,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쉼터와 숙소

를 제공하고, 직업 자활 지원 센터를 운영함. 2017년 37,310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했음. 현재 1,946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1,050 명의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이래 오로라는 레그랑브와장의 총괄 관리자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조정과 기술 및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음. 탁아소 및 숙박 센터를 관리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② 예스위캠프(Yes We camp) 협회: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콘텐츠 생산

- 2013년에 설립한 이래 예스위캠프는 혁신적이고 기능적이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인 공간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마르세이유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약 50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운영팀이 각 프로젝트마다 외부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함
- 레그랑브와장에서는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즉 문화예술 프로그램, 홍보, 공유 공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③ 플라토 어번(Plateau Urbain) 협동조합: 공간 계획 및 조성, 건물 리모델링

- 빈 건물, 유휴부지 등을 발굴하여 문화단체들과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건물 또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음
- 레그랑브와장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레그랑브와장의 공간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함 2020년 6월에는 모두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및 건물 활용도, 예산 등을 고려해 급적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리모델링과 기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함

운영 방식

① 민주적 운영

- 다용도로 사용되는 공간 및 시설, 입주자·이용자·지역주민·운영주체 등 다양한 관계자 등 레그랑브와장의 복합적이고 한시적이며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거버넌스를 채택함
- 레그랑브와장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하며, 이 총회는 지역거주민과 거주자, 입주기관, 사업참여자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매월 또는 격월로 실시하고 있음. 모두에게 공개되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 매주 수요일 열린식당을 운영하며, 운영은 오로라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지원 기관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같이 식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기회 부여와 자활 지원을 목표로 함

② 지역주민 참여

- 특히 시즌 1에는 자유롭게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했으나, 시즌2부터 소유기관의 요구로 지역참여와 주민참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지역재개발의 사전역할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함
- 인근 지역주민과도 마찰은 없음. 오히려 지역주민이 대안의 공간으로 지역에 카페와 식당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여 반기고 있음, 주말에 행사 등의 소음과 냄새로 항의가 있으나, 같이 참여를 요청해서 마찰을 해결하고 있음

재정

- 사무실/창고/아틀리에 작업 공간 임대료(85만 유로), 수위실(열쇠 보관, 반려식물 케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동네관리소 역할도 포함) 운영, 세탁, 식당, 빵집 등 영업 수수료(45만 유로), 노숙인 데이케어센터/숙박비(30만 유로), 외부행사 공간 사용료(16만 유로), 보조금(4만 유로)을 합해서 총 180만 유로를 운영비로 조달

※ 파리참여예산(Paris Participatory Budget)제도를 활용, 파리시와 일드프랑스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 직원 급여(20명 상근) 및 운영비(유지보수, 안전,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투자), 공동 공간 개발비로 지출



프랑스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등장	창업	강화	단계 변화
보조금과 기부	신뢰자금(프랑스 악티브)			
	참여금융/클라우드펀딩			
	공적 또는 사적 보조금			
	재단 기부			
자기자본 또는 준자기자본 투자	참여금융/클라우드펀딩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협약과 혁신기업펀드 Innov'ESS (프랑스 악티브)			
	SCOP INVEST (전국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 CGSCOP)			
	연대투자펀드 / ESS (예:시민투자클럽 Cigales, INCO 등)			
융자	참여금융/클라우드펀딩		NOVESS(공탁예금금고의 ESS 펀드)/총1억유로(1274 억원)	
	무이자 무보증대출(창업네트워크)			
	무이자 무보증대출(이니셔티브 프랑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및 활동지원 펀드 (프랑스 악티브)			
			저리융자 SIFA (프랑스 악티브)	
			저리융자 SOCODEN (CGSCOP)	
			미래투자프로그램 ESS (PIA) (공탁예금금고)	
			ESS 융자 (공공투자은행, Bpifrance)	
보증	프랑스 악티브 보증 : 연대기업펀드, FRANCE Active Garantie)			
			비영리민간단체 보증 (SOGAMA garantie)	
			협동조합 보증 (SOFISCOP, CGSCOP)	

*가로축: 사회연대경제 기업 단계, 세로축: 자금 지원 형태

기관 개요

- 1988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창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프랑스 공탁예금금고, 프랑스재단, 협동조합은행, 마시프 재단, 전국기업창업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의 투자로 설립
- 사회연대경제의 선구자인 프랑스 악티브는 사람, 고용 및 지역을 위한 금융 네트워크로서 사회 연대경제 기업을 창업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창업을 돕는 것을 동반 지원함. 그들에게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과 은행 및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연대 금융을 제공함. 기업을 창업하려는 실업자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전국 42개 지역에 132개의 창구를 갖고, 3개의 자회사를 운영:
 - ① 프랑스 악티브 보증사(FAG: Société France Active Garantie)
 - ② 프랑스 악티브 투자사(SIFA: Société d'Investissement France Active)

③ 프랑스 악티브 기금(FAFI: France Active Financement)

주요 내용

설립 배경

- 기존 금융이 실업 위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프랑스 공탁예금금고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출자로 창설하게 되었음
- 특히, 지방분권화법(82년)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지역에서의 시민 주도권 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요구가 증대됨
 - * 노동조합과의 연계 : 프랑스 노조민주연맹(CFDT) 사무총장이 과거 악티브의 의장이었음
- 1986~87년 고용 위기 속에서 장기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하지만 장기실업자들은 일반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악티브에서 보증을 해주기 시작함

주요 연혁

- 1988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5곳이 출자하여 설립
- 1991년 프랑스 악티브 투자사(SIFA) 설립
- 1994년 미로바(자산운용사 나티시스의 자회사)와 노동통합공동기금(FCPIED) 조성
- 1995년 프랑스 악티브 보증사(FAG) 창설
- 2007년 지역연대투자기금(FRIS) 설립
- 2008년 창업지원프로그램(NACRE)을 총괄하는 프랑스 악티브 기금(FAFI) 설립
- 2016년 새로운 전략계획 채택 «2020 야망 -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업»

미션 및 핵심 가치

-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성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음.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매년 7,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반 지원하여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또는 안정화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를 위해 200백만 유로에 가까운 자금을 조성하였음
- 핵심 가치
 - ① 연대: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기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개발
 - ② 지역: 전국-지역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통해 보다 지역적인 개입을 보장
 - ③ 전문 직업의식의 강화: 악티브의 전문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 중 81%가 3년

이상 생존(전국 평균 생존률은 72%)⁶⁾

조직: 구성원과 지역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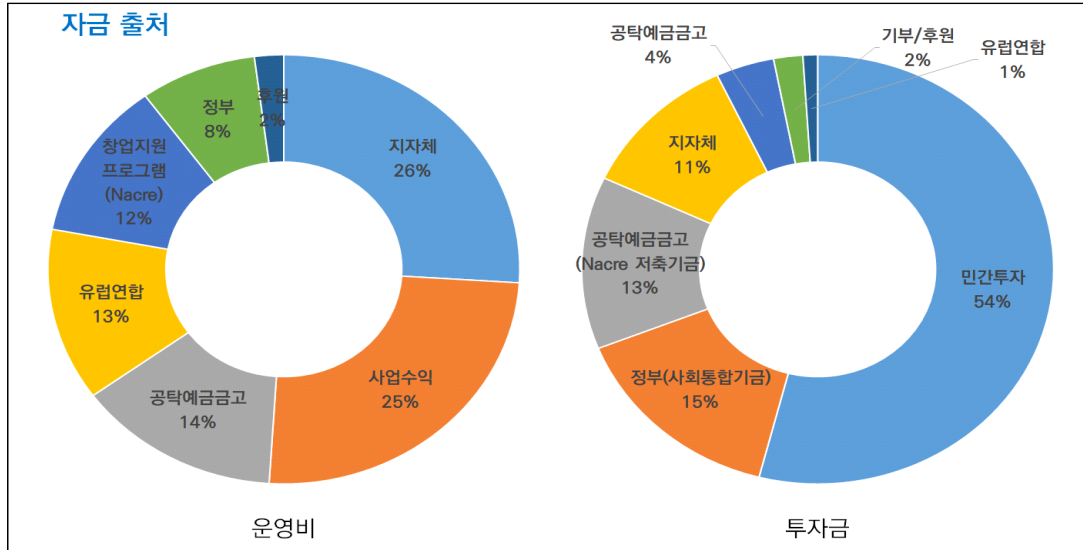
- 전국협회, 42개 지부(132개 창구), 3개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650명의 직원과 2,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 지원 부분과 창업보증 부분에 금융, 재정, 경제, 경영 출신의 전문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음
 - 금융전문가, 지자체 결정권자들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고, 투자가 이뤄진 후에는 투자한 기업들이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 활동이 필요함
- 악티브는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충분하지 않은 대규모 재정지원 프로젝트는 본부에서 담당. 정부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금과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 지역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처음 악티브가 재정보증을 시작할 때 지자체가 보증을 서 주었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별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젝트를 위해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음
- 지부들은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업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편를 모으는 것은 각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티브 본부에서 함

사업현황

- 2017년까지 사업실적⁷⁾
 - 신규 창출 또는 유지된 일자리: 34,168개
 - 상담 및 방향 지원 프로젝트 22,980건 > 동반지원 프로젝트 13,914건 > 자금지원 프로젝트 7,402건
 - *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발굴(0.5%), 창업(65%), 성장(13%), 인수(21%), 전환(0.5%)
 - * 지원받은 기업인의 프로필을 보면, 90%가 구직자(1/3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으로 보면 20%가 낙후지역 소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매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 31,000개
 - 자금 조성: 303백만 유로(2016년에 비해 12.6% 증가)
- 운영 재원
 - 운영비 조달: 지자체 > 사업수익 > 공탁예금금고 > 유럽연합 > 창업지원프로그램 보조금 > 정부 > 후원 순
 - 투자금 조달: 민간투자 > 정부(사회통합기금) > 공탁예금금고(창업지원프로그램 저축기금) > 지자체 > 공탁예금금고 > 기부/후원 > 유럽연합 순

6) 지원을 받은 기업의 91%가 프랑스 악티브의 동반지원이 창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프랑스악티브 2017년 사업보고서)

7) <https://www.franceactiv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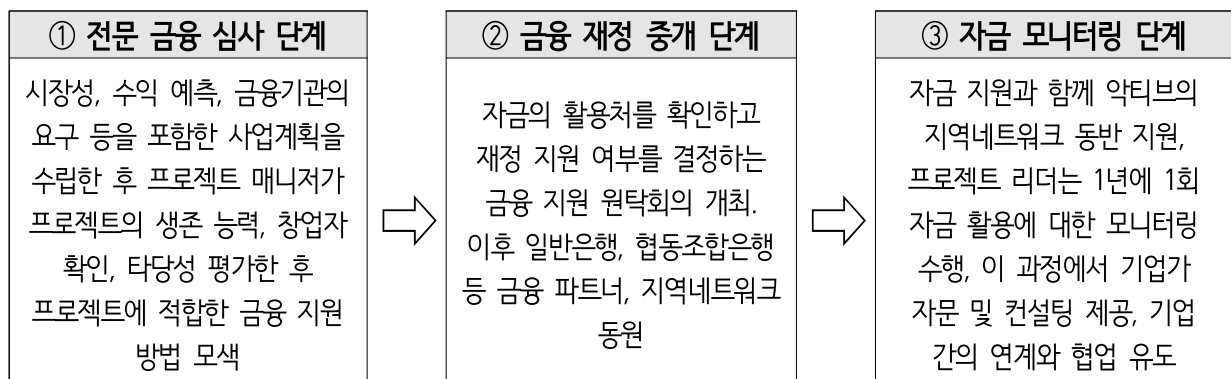


○ 악티브는 사업 수행시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금융기관과 협업하고자 함

악티브가 제공하는 솔루션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주로 지원하지만,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기업도 지원함. 이는 기업가들의 실천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함
- 1개 기업에 대해 보증, 투자,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맞춤형으로 혼합하여 제공
 - ① 기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2017년 기준, 지역동반지원 프로그램(DLA)에 따라 2,500여개 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 ※ 지역동반지원 프로그램(DLA)은 2002년에 유럽사회기금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와 공탁예금금고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기업(민간단체, 협동조합, 노동통합기업)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장려
 - ③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서비스 지원 프로세스



금융서비스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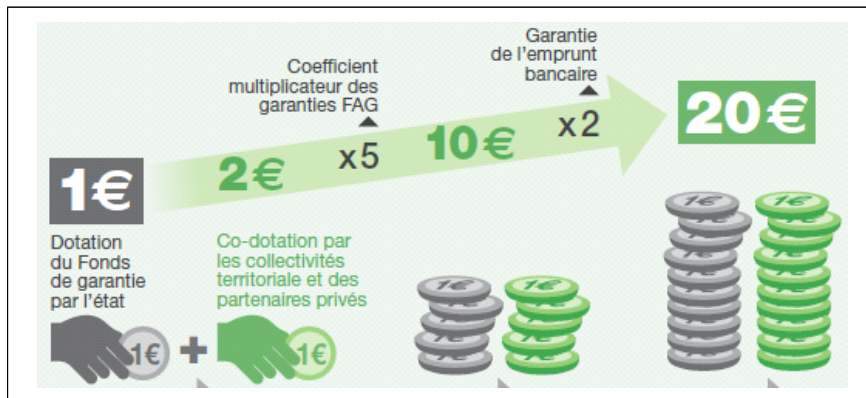
- 법적 지위가 민간단체(Association)인 악티브는 이사회 아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회사를 통해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악티브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명칭	특징	대상	지원내역
신뢰기금	-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출현을 돕는 기금 - 6-9개월 간 타당성 조사비의 일부 지원 (예비창업자 급여, 교통비, 경상비 등)	- 사회연대경제 기업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창업자들, 타당성조사 수행 기업을 통해 자신의 급여를 마련해야 하는 모든 예비창업자들 - 신규 사회연대경제 기업 설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	- 타당성조사 수행 기업이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비(세금 별도)의 최대 50%까지(예비창업자 급여, 교통비, 경상비 등) - 보조금 형태로 프로젝트당 최대 2만 유로(특정 지역: 2만8천유로) - 주의사항: 다른 협력자의 공동 자금지원이 의무
이노베스 (Innov'ES)	- 프랑스악티브 투자자(SIFA)는 이노베스 펀드를 통해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연대기업의 프로젝트의 발전을 지원	-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가진, 창업 중이거나 성장하고 있는 모든 연대기업 • 경제 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조직, 노동적용 기업, 경제적 활동이나 고용 창출 사회 기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잠재성이 큰 사회혁신 프로젝트 보유 기업들	- 자기자본에 출자: 채권/전환사채, 출자증권, 당좌예금 출자를 통한 보충 자본에의 참여 - 용자 기간: 최소 6개월간의 중기 대부(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 금액: 5천~50만 유로 - 기간: 3~7년
저리대출	- 연대기업의 자본화 지원: - 경제 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안정화하는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단체와 기업 지원 - 투자 유치 및 기업 발전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 고용을 창출하거나 공고히 하는, 설립 중이거나 발전하고 있는 모든 연대기업 • 경제적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조직화, 노동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 경제적 활동과 고용 창출 사회 기여 단체들, 공익협동조합, 사업고용협동조합, 일자리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노동자들을 통해 운영되는 기업(특히 노동자협동조합 형태)	- 주로는 저리융자로. 어떤 경우에는 연합 당좌예금으로 개입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 기업 자본의 최소 5%를 점유 - 금액: 5천~1백만 유로 - 기간: 최대 5년(경우에 따라서는 6년)
프랑스 악티브 보증	- 창업자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이를 통해 고용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조직화와 연대기업의 요구에 부응	- 실업 상태이거나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 - 설립 중이거나 발전 중에 있으면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공고히 하는 모든 연대기업	- 프랑스 악티브 보증을 통한 담보대출: 최소 6개월 중기 대출(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 최고 보증 금액: • 설립 중 기업을 위해 65% 또는 최소 3년간 • 다른 경우에는 50% • 보증금액은 4만5천유로가 한도 - 기간: 최대 5년
연대기업 기금	- 연대기업기금(FOES)에 의한 보증은 2가지 유형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출 포함: • 운영 자금 • 투자 유치	- 비 영리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기금 등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회연대경제 기업들	- 연대기업기금을 통한 담보대출: 2~7년의 기간, 최소 5천유로 금액. 최대 금액 규정은 없음 - 연대기업기금을 통한 대출 커버율: 최대 보증 지분은 50%. 보증 한도액은 10만 유로 - 연대기업기금에 더해 다른 보증이 동원될 경우 두 보증의 최대 지분은 최대 80%까지

■ 보증 업무

- 악티브의 보증업무는 1995년에 창립한 프랑스 악티브 보증사(FAG)를 통해 수행
 - 프랑스에서 보증은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특히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행해서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게 하거나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을 지원함
 - 보증을 위한 재원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통해 만들어지며 프랑스 정부 및 지자체, 유럽연합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마련하였으며, 규모는 2천만 유로 수준
 - 매년 보증 건수가 증가해 2017년 23,087건을 보증하였고 그 액수도 252백만 유로에 달함.(현재 보증 증인 금액은 총 409백만 유로)
- 악티브의 전적인 책임아래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지부에서 수행)가 이루어지고,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 철저한 심사체계 덕분에 악티브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음. 최대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나 보통 40~50% 수준임. 악티브 보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의 투자를 받으라는 취지
 - 보증금액은 기업 프로필에 따라 5만, 10만, 20만 유로로 달라짐. 또한 기업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보증은 제한을 두거나 배제함
 - 프랑스 악티브의 보증은 마중물 효과
 - ※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1유로의 보조금을 받으면 악티브는 지자체와 민간파트너로부터 1유로의 매칭 보조금을 받아 2유로를 만들고 그것의 5배에 해당하는 10유로에 대해서 보증을 서줌. 은행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임



- 보증료는 보증액의 평균 2% 수준으로 투자처에 따라 다르며, 회수율은 80% 수준임

■ 투자 업무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는 1991년에 창립한 프랑스 악티브 투자사(SIFA)를 통해 수행
 - 작은 조직에는 15,000~20,000 유로, 큰 기업에 대해선 100만 유로(10억 원)까지 투자 가능
 - 투자기간은 5~7년(최장 10년)이고, 투자수익은 5~6%이고,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거의 0%

수준

- 대부분 50명 이내 직원을 가진 기업, 가장 큰 곳은 500~1,000명 임직원이 있음
- 2017년 말 프랑스 액티브 투자사의 자본금은 190백만 유로로 연대임금기금을 통한 연대투자 금액의 유입이 기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2017년 한 해만 35백만 유로를 조성해 신기록을 세움
- 2017년에는 26백만4,000유로를 367개 기업에 투자해 13,5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이 중 660만 유로는 기업의 자기자본에 투자함
- 액티브 투자회사는 15,000~150만 유로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회사가 파산을 했을 경우 채권회수에서 가장 후순위가 액티브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큼. 무이자 융자의 경우 액티브의 수익 배당은 2%로 상징적인 수준이나, 액티브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는 회계결산 때마다 6~7%의 배당을 받음. 따라서 액티브는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 매우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투자받은 기업이 3년간 평균 13.4명의 고용 창출 성과 달성
-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우선순위 주요 투자분야로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영세 비영리 조직, 청년 창업(주로 비즈니스 스쿨 졸업), 환경·에너지·로컬푸드 분야의 프로젝트임
- 연대 기업에 대한 투자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고용창출 여부로 판단. 이 중 경제적 영향은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재무구조상 매출·수익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

사회연대경제 투자확대를 위한 연대임금기금 제도
(Epargne salariale solidaire)

- 연대금융 연합체에서 연대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 ※ **파비우스법(loi Fabius)**: 2001년 2월 제정된 파비우스법은 기업이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 법임. 이 법에 연대기금과 연대임금기금에 관한 조항이 있음
 - ※ **연대임금기금법**: 50명 이상인 기업과 종업원은 임금의 일부로 연대임금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음. 기업은 연대임금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모아진 기금 중 일부를 연대경제 분야에 투자해야 함. 피고용인들은 납부 여부가 자유이지만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피고용인들이 투자펀드로 넣으면 90%는 일반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10%는 연대기업, 연대경제 분야에 투자해야 함
- 2014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액티브는 930만 유로의 연대임금기금을 조성해 285개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누적 집계
- 프랑스에서 시민이 연대금융에 참여하는 방법
 - ① 금융기관 이용: 은행, 자산관리사, 보험사 등의 연대금융상품에 직접 가입
 - ② 본인 기업을 통한 방법: 2010년 1월부터 모든 기업은 연대 기반 공제펀드 가입이 가능. 소속 기업의 인력관리과에서 연대기금 공제펀드에 가입할 수 있음.
 - ③ 연대금융 투자사 이용: 액티브의 투자사(SIFA)와 같은 연대금융 투자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법

- 모든 실업자가 창업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연대기업에 주식 또는 채권 형태로 투자

- 악티브에서 지원.투자하는 기업은 우선 연대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⁸⁾이어야 함.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 감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적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재정수단을 제공해줘야 함
- 사회연대경제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기업은 인증을 해주는 데 연대투자금액의 25%는 반드시 이런 인증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함(예: 노동통합기업, 지역관리기업 등)

■용자 업무와 프랑스 악티브 기금(FAFI)

- 비영리민간단체인 프랑스 악티브는 저축기금에서 유입된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함
 - 대출금액 3,000~4,000유로, 이자율은 0%로 운영하며 대손에 대한 보장은 정부가 해주고 있음
- 2009년에 설립된 프랑스 악티브 기금(FAFI)은 창업을 하거나 부도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나크르(Nacre) 위탁 운영 기관으로 2017년에 이자율 0%의 2,300만만 유로를 대출(161백만 유로의 은행 대출 유도)하여 7,4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960개 기업 창업에 기여함
 - 실업자 창업 지원이 사회 통합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구분	인수 또는 창업을 위한 새로운 동반 지원 ⁹⁾ (Nacre)
자격	- 실업수당 수령 구직자 또는 경제 해고 후 재취업중인 자로 재분류 특별수당(ASR) 수령자,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구직자 리스트에 등록된 실업수당 미해당 구직자, 능동적연대수당(RSA) 수령자, 또는 특별연대수당(ASS) 또는 대기임시수당(Ata) 수령자 - 18~25세인 사람, 실업보험에 의해 수당을 받지 않는 30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장애인, 구직자 리스트에 등록된 50세 이상인자 - 청산 또는 법정관리의 범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는 노동자 - 도시정책 가장 우선지역(프랑스에 751개가 여기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 실업률,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등) 에서 창업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제3자(금융, 파트너 등)에게 소개할 창업 또는 기업인수 계획을 기술적으로 마무리,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것을 해결할 조건들을 연구 - 자금조달 계획 수립 지원, 창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모색단계에서 지원,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융 확보(최대 5년간 1천~1만 유로에 대해 이자율 0%의 대출) - 기업의 사업개발과 정착 지원

8) 연대기업 인증에 관한 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되었고, 지난 2014년 제정된 사회연대경제법에 의해 사회적유용성의 연대기업으로 개정된 상태임. ① 사회적 유용성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제2조) ②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목적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 기업의 회계 또는 재정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③ 급여 간 격차의 상한선을 두는 기업의 급여 정책 등의 조건

대상은 노동통합기업, 임시고용통합기업, 중개민간단체, 노동통합 아틀리에와 작업장, 사회통합조직과 장애 아동·성인 지원센터(가족과 사회복지법), 아동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및 사회재활센터, 지역관리기업, 직업적응기업, 재택근무지원센터, 근로시설 및 근로지원 서비스, 공적 유용성이 인정된 민간단체 또는 재단 등이 포함.

9) 나크르(NACRE :Nouvel accompagnement pour la création ou la reprise d'entreprise)는 프로젝트 구상단계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미 창업 계획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제품, 고객, 납품업체, 설비와 재정 수요 등)

□ 시사점

○ 사회연대경제에 원활한 자금유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프랑스는 연대임금기금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으로 마련하였음.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국내는 최근 정책방향에 따라 임팩트 투자재원이 마련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회적경제 전체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존재

○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 악티브는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국 42개 지부가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내 다양한 지원조직(Tag52 등), 사회적경제 조직, 공제조합 등과 협업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부는 지역별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수행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국내에서는 중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역 단위의 개발 전략 혹은 수행조직이 부재하여 자금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악티브의 주요 전략 및 네트워크 사업구조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판단됨

○ 타 금융기관과 연대를 통한 임팩트 확대

-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투자 시 타 공공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손실위험을 경감시키고, 자체 자금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
- 특히, 평균 보증률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별도 자체 심사 없이 대출을 집행한다는 점은 악티브의 네트워크와 위험관리수준에 대해 오랜 기간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봄
- 국내의 사회적금융 조직들은 역사가 짧고 영세하여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별화된 역량을 토대로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해 나갈지 악티브의 성장경로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기관 개요

-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는 노동자협동조합(SCOP)과 공익협동조합(SCIC) 형태로 기업의 창업, 인수 및 전환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로서 상담 및 정보, 기간에 따른 동반 지원, 금융, 교육, 기업가간 교류, 법·제도 및 정책 교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협동조합고등위원회, 사회·경제·환경위원회(Cese),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을 대변하고 협동조합의 권리와 연관된 법·제도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참여
-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는 지역연합회와 업종·산업연합회로 구성:
 - 총 12개의 지역연합회로 구성되어 각 지역연합회 간 연계 및 조정, 지역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 업무 지원
 - 건설(28.9%), 제조업(29.2%), 커뮤니케이션(거의 절반을 차지)등 3개의 업종·산업연합회

구분	현황	주요사업
건설연합회 www.scopbtp.org	- 1946년에 설립 - 건축 및 공공건설공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구성 - 500개 조합 회원(대/소규모건설 기업과 건축가, 기술사무소, 토지측량기사 등 연관 기업)	- 전문 직능 조합의 고전적 임무 수행 - 건설연합회는 건설 분야 4개 고용주 조직 중 하나로 인정되어 관련된 모든 기관에 참여하며 협력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자협동조합을 대변
커뮤니케이션 연합회 www.focom.coop www.lacom.coop www.made-in-scop.coop	- 1949년에 설립 -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래픽 디자인, 콘텐츠 편집, 레이아웃, 인쇄, 시청각, 웹, 이벤트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문 분야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구성 - 200개 조합 회원	- 회원 협동조합에게 산업 및 영업 전략 지원, 기술 및 시장 모니터링 조직화, 상호부조 솔루션 제공 - 메이드 인 스코프(MADEinSCOP)은 독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해 제작된 전 제품을 판매하고, 우선 구매 조건을 허용하는 중앙구매본부, "Web to print"라는 정보시스템을 제공
제조업연합회	- 1981년에 설립 - 텔레콤, 전자, 금속, 플라스틱, 목재 가공, 섬유, 유리, 도자기, 식품 등 분야로 구성 - 305개 조합 회원	- 창업, 창업 초기, 위기 또는 리스크가 큰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개별적 진단을 통해 회원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 - 주제별 워크숍, 전문가 초청, 회사 간 공동 프로젝트, 자원과 수단의 상호부조 등 소속 기업들의 공통, 집단적 행동을 선도하거나 지원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인더스트리 3.coop"이라는 산업체 모델 촉진

- 연합회 본부엔 25명이 근무, 180명이 지부 포함
- 연합회는 공탁예금금고, 프랑스 악티브, 클라우드 펀딩 네트워크와 함께 금융 지원
- 노동자협동조합 중 규모화 하려는 곳을 지원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 함
-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노동자협동조합연합(CECOP)에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 참여

주요 내용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주요 특징

- 현재 프랑스에는 은행, 상업, 소비자, 수공업, 주거, 학교, 수산업 등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있음. 노동자협동조합과 공익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은 2,366개 기업에 50,650명 고용, 조합원은 27,300명
 - 2017년 통계¹⁰⁾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노동자협동조합은 156개, 공익협동조합은 134개가 설립되었음. 이 중 200개는 신규 창업, 55개는 일반 기업에서 전환, 31개는 민간단체 또는 다른 협동조합 형태에서 전환, 19개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145개(노동자협동조합 108개, 공익협동조합 34개)가 폐업을 하였으나 2016년보다 14개 적은 수치임
- 공익협동조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700여 개 조합에 6,860명 고용, 조합원은 4,700명
 - 공익협동조합 직원 중 75%가 노동자조합원이며, 나머지는 다른 유형의 조합원
- 고용 증가의 84%에 해당하는 분야는 서비스 부문으로 2016년에 비해 16.4% 증가한 3,400명의 추가 고용을 기록

구분	협동조합 비중(%)	고용(%)	매출(%)
서비스	48.9	39.7	23.4
건설	15.7	20.2	28.9
제조업	12.2	16.4	29.2
교육, 의료, 사회복지	9.1	10.7	4.7
상업	8.7	3.7	7.4
에너지 환경	2.1	3.8	3.1
운송	2.1	5.1	2.9
농업	1.2	0.4	0.3

- 2017년 전체 매출은 50억 유로이며, 기업의 5년 생존율은 67%(중소기업 5년 생존율은 60%)
- 노동자협동조합의 대부분이 지역에 착근하며, 이윤 배분,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협동조합 유형과 차이를 나타냄

10)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 2017년 사업보고서

- 프랑스 협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잉여분배 비율은 현재 비분할적립금 16%, 직원 25%(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 조합원 33% 이내(자본 출자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됨
- 실제로 2017년에는 평균 비분할적립금 45%(7,600만 유로), 직원 43%(7,200만 유로), 조합원 12%(2,000만 유로) 분배된 것으로 집계됨
- 비분할적립금, 기부는 내부 유보로 직원 또는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산시 타 협동조합 등에 전달
-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에서는 연합회가 보유한 금융수단들을 활용해 173개 노동자협동조합(2,880명 고용)에 대해 212건의 금융지원(약 830만 유로에 해당)을 추진함

2017년	금융 지원 (건)	금액(천유로)
저리 대출	89	3,586
출자 채권	15	1,990
보증	108	2,760
합계	212	8,336

- 용도별 투자금액의 비중을 보면, 성장(64%), 전환(14%), 신규 창업(8%), 인수 창업(8%), 재기(6%)로 집계됨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회 금융지원 서비스]

기관명	목적	대상	지원내역
스콥인베스트 투자 (SCOP INVEST)	• 자기자본 강화 • 조합원 투자와 병행하여 영구자본 조성에 결합 • 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원 준비 (재무구조의 개선)	설립, 전환, 인수, 운영 중인 모든 협동조합	프로젝트당 2만5천유로 부터 영구자본의 50%까지 기간 : 7년 이상
저리대출 소코덴 (SOCODEN)	• 기업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비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자금 조달 • 회원 투자와 병행하여 항시적 자본 구성을 결합 • 연대금융과 외부유자를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투자 자금 확대	설립, 전환, 인수 또는 운영 중인 모든 협동조합	3천유로, 급여 노동자가 5명을 넘을 경우에 대한 급여 5천유로까지, 적어도 급여 노동자가 6명이 되는 협동조합을 위한 급여 기간: 3~5년
소피스콥 (SOFISCOM)	• 중장기의 은행 차용에 대한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함	설립, 전환, 인수 또는 운영 중인 모든 협동조합	은행 대출금의 최대 50%까지 보증. 개인 보증은 하지 않음

공익협동조합

- 공익협동조합은 공공성을 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의 이

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조합원이 결합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

- 공익협동조합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거버넌스로 운영(직원, 서비스 수혜자 및 이용자, 이해관계자 등)

- 공익협동조합은 사업목적도 다양함

※ 주요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문화, 주택, 공유 자동차 등

- 17년 통계로 741개 공익협동조합이 있으며, 2016년 대비 15.6% 성장

- 공익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되었는데,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확대 됨

- 현재, 35~40%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은 지자체 등이 50%이상 참여가능하며, 지방정부 참여는 의무는 아님

- 공익협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정해지며, 이익의 57.5~100%까지 사내 유보함

- 공익협동조합과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슷한 형태이지만 참여 주체와 이익배분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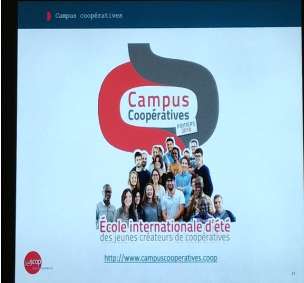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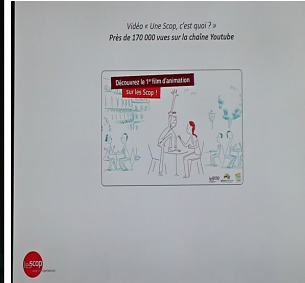
공익협동조합(SCIC)

- 2001년에 공익협동조합 법 제정
-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에 기초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 공익협동조합은 최소 그룹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형태로 노동자와 서비스 수혜자는 기본이고 지방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그룹 참여 가능
- 2013년 이전까지 지방정부의 자본 투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되었지만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 제정 이후 50%를 초과할 수 있게 되었음
-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들이 51%의 지분을 갖고 65%이상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과 차이. 하지만 지방정부의 투표권이 자본 비율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님.
- 57.5%~100% 공익협동조합의 이익은 다시 협동조합에 투자되어야 함. 이 규정이 공익협동조합을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받게 하고 있음

홍보

- 2011년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홍보는 주로 언론에 사진, 협동조합 소개, 슬로건 부각하는 모델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기업의 건강한 전환(주식회사→노동자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로 전통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소개하며, 은퇴 기업인에게 노동자협동조합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주요 목표. 또한, 기업을 직원들에게 양도하도록 권장함
- 기업의 경영 본부와 회계 담당에게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상, 방식으로 홍보에 집중한 결과, 2010년 노동자협동조합의 인지도가 58%였는데, 2013년 80%까지 상승함
- 온라인 홍보매체(유튜브 등)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계층에도 홍보를 강화하는 중
- 특히 퀴즈 방식 등을 적용하고, 2년마다 협동조합 여름학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노동자협동조합에 훨씬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연간 홍보물을 위한 예산으로: 30-35만 유로를 집행함

			
홍보 브로셔 및 책자	잡지 홍보	캠퍼스 여름학교	유튜브 홍보 등

노동자협동조합의 창립, 교육 등 지원

- **지도자 교육:** 노동자협동조합의 리더를 대상으로 지난 8년간 경영자 과정(1년 코스) 운영 중이며,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집중(도핀대학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 전략, 거버넌스 구조, 인사관리교육)
 - 2018년 경영자 과정 수료생은 총 130명
- **조합원 교육:**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진행. 이틀간 가상 기업 경영을 게임으로 진행하거나, 역할극, 실제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지역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입문프로그램 2로 경영이사들을 위한 6일 과정(초규모 기업 대상) 시작하였음
- **청소년 대상 교육:** 지난 2년 동안 스페인,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 15-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발 운영
 - 3개 방법으로 구성
 - 협동조합을 시작하라 - 5단계로 창업이 가능토록 작성 (각 모듈별로 준비)
 - 협동조합과 놀아라 - 주로 퀴즈 게임형으로 구성
 - 3개의 비디오 - 왜 협동조합을 만드나? 노동과 자신의 관계성, 협동조합의 가치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구현)

□ 시사점

- 공공성, 지역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집단적 거버넌스 등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로써 공익협동조합의 필요성 확인
 - 환경,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하고 민관 협력으로 진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점과 해당 사업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시민, 정부(혹은 지자체) 등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음
 - 의결권 등 1인 1표제보다는 지자체는 출자는 하되 의결권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통

해 지자체의 권한을 한정함

- 우리도 민관 협력이 필요한 환경,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의 여러 당사자가 함께 하는 장을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 및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음
- 홍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콘텐츠에 맞는 홍보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



기관 개요

- 노동통합기업 548개가 참여한 전국적인 비영리민간단체로 284개의 일자리 적응 단체(AI), 108개의 노동통합 작업장(ACI), 50개의 임시노동통합기업(ETTI)과 사회연대경제 임시노동기업(ETT ESS), 20개의 소셜프랜차이즈그룹(Proxim'Services), 28개의 노동통합기업(EI), 24개의 조직(기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교육기관), 25개의 연대경제그룹(GES)에 속한 60여 개의 기업 등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
- 30년 전 네트워크의 창립이후 노동통합기업연합회(COORACE:COORdination des associations d'Aide aux Chômeurs par l'Emploi)의 회원들은 경제적·사회적 교환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포용과 연대의 사회를 지향하는, 같은 비전아래 일자리에 중심을 둔 활동을 전개
 - 지역에 기반한 연대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실현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공동의 프로젝트로 삼고 모든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접근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서비스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 연합회 회원들 중에 10여 개의 경제협력지역거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전국 대표성을 통한 정책교섭과 실업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형성(법률적, 행정적 지원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조직은 이사회, 사무총장 및 사업, 교육, 홍보부서에 직원 21명이 일하고 있음
- 경과적 일자리 포함 14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하며, 정규일자리 취업을 늘려 나가는 것이 목표
 - ※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근로 상태인 사람이 한 해 65,695명(2016년 통계)

주요 내용

설립 배경

- 30년 전 대량실업을 계기로 설립되었고, 지역에서 형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확대됨
- 이후 구조화된 실업위기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지원
- 초기에는 법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실업지원이 법제화 됨
- 현재 직간접적으로 3000개 단체가 협력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음

조직 및 활동

- 이사회는 연합회 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비상임 자원봉사자로 구성됨

- 사무총장은 정치인, 정부, 의회 등에 정책교섭과 업무 및 조직 총괄관리
- 적극적인 정치권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활동보고서, 조사자료 등을 제공함
-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인들의 정책 실행의지 촉진
-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경험 많은 시니어 또는 은퇴자로 구성되며, 이사로 선출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됨
- 주로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 계층의 참여가 증가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 목표

교육

- 회원조직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기술교육 시행중
-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 공통요구와 개별적 필요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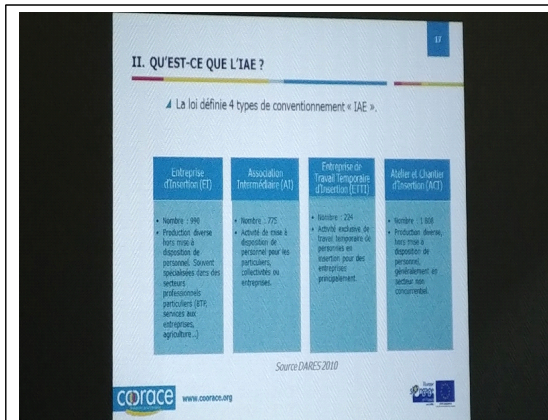
사업 구조

- 기능이 다른 4가지 영역을 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4가지 영역 : 노동통합기업, 일자리연계단체, 일자리중계기업, 노동통합작업장

노동통합기업	사업내용 : 청소, 정원관리, 건물관리, 대인서비스 등 조직유형 : 영리 고용비용 : 1만 유로 /1인
일자리연계단체	사업내용 : 사업 : 개인, 기업, 공공 고객연결 조직유형 : 영리 고용비용 : 1천3백 유로 /1인
일자리중계기업	사업내용 : 계약에 의한 인력파견 (기업대상)/ 조직유형 : 영리 고용비용 : 5천 유로 /1인
노동통합작업장	사업내용 : 교육, 훈련 조직유형 : 비영리 고용비용 : 2만 유로 /2인

- 노동자가 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면담을 진행하여 각 영역으로 배치 결정
- 최장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노동통합작업장)외에는 고용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데, 보수가 너무 적을 경우 실업수당으로 보조 받기도 함
- 노동통합작업장은 실업수당을 받으며 2인 1조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노동통합작업장에서 훈련 성과가 좋으면 앞 단계로 이전 함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대략 60%가 직업을 되찾고 40%는 재투입
 - 40%가 구직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직무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강, 거주, 언어, 교통, 알코올 등 문제에 따른 전문가 도움을 받음



4가지 핵심 영역



사회혁신 홍보

프랑스의 최근 현황

- 프랑스는 최근 지역에 따라 고용여건에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인력에 대한 구인이 구직보다 많은 지역도 있음
-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이 부족하여 60만개 일자리가 비어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구직자가 많고 2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많은 딜레마가 발생함
- 이와 같은 구직-구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채용 방법론(비타엘)을 제안함
- 기업수요는 고급인력인 반면 구직자의 이력은 낮은 점에 주목하여, 학력, 자격증 등 실제 업무에 비해 과잉 스펙을 원하는 경우, 채용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여 적절한 스펙의 인력을 찾아 고용제안하고, 이를 통해 기업직무의 재조정하고 재배치까지 제안함
- 과거, 실업에 대처하여 대인서비스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일반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고 있음
- 특히, 이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자치단체장으로 바뀌는 지역의 경우 재정지원이 위축되는 사례들이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 중임
- 2008년 노동법에 노동통합기업을 정의하였으나 현실의 필요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개정노력이 진행 중

□ 시사점

- 실업 대응체계의 개선
 - 경과적일자리 제공기관의 필요
 - 실업이 늘고 몇 차례 이직이 불가피한 시대환경을 반영
 - 이직기간의 공백을 메우고 새 일을 찾기 위한 경과적일자리 제공은 유익함
 - 경과적일자리 기관의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하여 육성하는 것이 요구됨
 - 경과적일자리, 교육훈련, 취·창업지원 등 기능의 통합 및 연계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실업급여와 교육비지원, 취업알선으로 요약됨
 - 경과적일자리기관이 있다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다양한 업종의 경과적일자리가 있다면 개별적인 구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임

- 실업급여 사각지대 제거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 직업형태와 소득실효 방법이 다양해지는 현실의 변화에 조응 필요

- 고용보험 가입을 직장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포함하는 방안 필요함

○ 실업문제에 대한 민관협력의 증진

- 실업대응을 위한 민간 기관 육성 및 맵핑

- 공공 고용센터와 민간 실업대응기관의 연계성 증진

- 특히 청년 취·창업 지원영역의 증진과 보강 요구됨



기관 개요

설립 배경 및 현황

- 지역기반 대인서비스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
- 프랑스중소기업연합회에 소속된 고용주 연맹으로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소규모업체와 중소기업을 대표
- 100개 이상의 기초·광역 대표 네트워크
- 소상공인보호연합회, 가족수당지원기관, 건강보험기금, 기업경쟁소비고용지방청, 지역장애인센터, 기초·광역 지방정부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영유아, 노인과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돌봄 영역을 포괄하는 대인·근린서비스기업 연합으로 지난 10년간 프랑스 돌봄 영역의 대표적 연합체로 성장
- 대인서비스 분야에서 연간 10% 이상의 채용 증가
- 매년 40만 명의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4,300백만 누적시간)

규모

- 회원단체: 1,600개 기업(종사자 7만 명)
- 프랑스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약 6천 개로 40만 명이 종사(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 시설종사자 제외, 2018년)
- 프랑스 대인·근린서비스기업연합회는 법적 범주나 조직 형태보다는 사업(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함. 회원단체의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어소시에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가입
- 회원단체 중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NF인증기업 (NF Services-Qualicert-Qualisap-Handéo)

운영(거버넌스)

- 총회 : 연 1회
- 위원회: 월 1회(13명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 임기 3년)
- 19명의 지역 대표단과 51명의 광역 대의원이 프랑스 대인·근린서비스기업연합회 대표단 네트워크 구성

주요 사업

			
계속 가치의 구조화	제안 정책 및 사업 제안	강화 회원 서비스	예측 산업의 미래 준비

향후 비전

- ① 전 세대가 공간과 삶을 공유하는 세대 간 연대
 -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역사회에서 공간과 삶을 공유하는 세대간-세대내 연대 필요
 - 궁극적 목적은 노인이 폐쇄된 곳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삶을 유지하는 것
 - 청년층도 고령화를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 본인의 모습임을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 강조
- ② 2024년 파리올림픽, 노인과 장애인이 잘사는 나라
 - 전략적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의 계기로 삼고자 함
 - 2024년 올림픽에서 파리가 노인·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목표
 - 실버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모집 및 양성은 시급한 과제

주요 내용

프랑스 돌봄 정책 현황

-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는 대표적인 복지국가
 - 2016년 기준 GDP 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1.5%로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공동 1위(스웨덴 28.3%, 노르웨이 25.1%, 독일 25.3%, 영국 21.5%, 한국 10.4%, OECD 평균 21%)
 - 1864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1979년 고령사회, 2019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
 - 201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19.6%(1,317만 여명)
 - 기대수명 증가로 2050년 프랑스 노인인구는 2,000만 명으로 추계(전체인구의 4분의 1)
- 고령화에 의한 사회적 위험의 대응책으로서 장기요양수당제도 도입
 - 2001년 『노인의 자립을 위한 개인독립수당에 관한 법률』 제정
 - 2002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자립수당 제도 도입, 사회의료팀이 등급 판정

- 2004년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을 위한 연대에 관한 법』에 의거, 의존성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국자립성연대기금 설립, 장기요양수당의 재정 보조
- 2016년 노년층의 자립성 상실 정도 측정에 관한 표준화 지표 마련: 개별자립수당의 수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판정 척도로, 대인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계산되는 요양서비스 비용의 한도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됨

사회의료팀(EMS, Equipe médico-sociale, 지자체 소관)

- 방문 조사와 평가 및 협의를 통해 노인의 등급을 판정하고 욕구를 사정
- 노년층의 자립성 상실 정도 측정에 관한 표준화 지표(AGGIR)에 준하여 개별자립수당의 수급 자격을 확정하고 의존 상태 노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계획을 제시하는 전문적 역할 수행, 즉 정해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될 서비스의 유형(가사지원, 식사 준비 및 제공, 세면 또는 목욕, 이동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
 - ①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대상자의 상황 평가
 - ②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계획의 고안
 - ③ 계획된 서비스의 설치와 실행
 - ④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의 네 단계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전달
- 의존도가 높은 1등급부터 의존도가 낮은 6등급까지 구분된 AGGIR 등급 평가 지표에서 4등급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한도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함
- 각 광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상이한 운용 방식을 선택
- 도의회 별로 지역의 관련 기관 및 인력 여건에 맞추어 구성원과 역할을 각기 다른 형태로 배분하여 운영(지역간 편차 존재)

○ 고령 노인 급증, 베이비붐세대 노령화로 인해 의료 등 사회적 재정지출 가중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재편에 따라 치료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가
- 돌봄 정책의 초점이 재정건전성 확보, 서비스 이용의 다변화,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이동

○ 재가복지서비스

- 1962년 “라로크 계획” 통해 재가복지 정책 도입, 이후 시설화를 막기 위한 서비스로 발전
- 방문서비스 유형: ① 수의계약으로 노인이 직접 계약, ② 서비스 업체를 정하여 급여가 직접 업체에게로 전달되는 용역 방식, ③ 대리서비스, 즉 고용자는 노인이지만 요양보호사의 병가, 이직과 같은 부재 상황 시 관리 및 행정업무를 서비스 업체에서 대행
- 서비스제공업체 유형: ① 기업 ② 어소시에이션, ③ 직접고용(80만 명 추산) ④ 고용중개서비스기관 등 4가지로 분류
 - ※ 고용중개서비스기관은 단기계약 중심의 고용으로 불안정한 서비스 등 여러 문제 발생

라로크 계획(Plan Laroque)

- 1962년 발표된 프랑스 사회보장계획
-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가사 지원 서비스 보편화, 사회서비스 도입 등 노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공간과 지위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기”의 윤리관을 추구하는 재가복지 정책 제시
-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현 프랑스 노인 정책에 영향
- 노인 전문 코디네이션을 공식적으로 개념화, 사회정책의 주요 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프랑스의 돌봄제도의 특징

○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 이념적 변화¹¹⁾

- 2002년 ‘자립성’ 개념을 도입, 사회적 원조 차원의 제도에서 개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로 진화, 자립성을 상실한 노인 돌봄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 촉진
- 노인의 의존성이 아닌 선택, 권리, 자유와 같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지원 방식 강조→ 각자의 권리 존중, 개인의 자립성을 최대한 보존
 - *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경향

○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을 위한 연대 : 정책 융합

- 2004년에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을 위한 연대에 관한 법』을 제정,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위기 및 재난 시 안정망 구축
- 2004년에 전국자립성연대기금 설치, 부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재원 제공 및 안정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보건청과의 공조로 운영
- 2005년, 『장애인의 권리, 기회, 참여, 시민권의 평등에 관한 장애인 법』 제정, 전국자립성연대기금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 보완 및 재편
 - * 노인과 장애인 구분에 의문 제기, 사회복지 및 의료의 중요한 전환점

○ 지방분권화

- 2004년부터 전개된 새로운 지방분권화에 따라 사회복지 및 사회적 의료 사업의 책임이 광역으로 전격 이양, 장애인·노인 복지서비스 역시 지방정부 공무원인 사회복지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
- 보를루 계획(2004)의 영향으로 『사회통합계획에 따른 대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대인 서비스의 활성화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가족 돌봄자에 대한 권익 보호 강조(연대휴가제, 가족지원휴가제 도입, 가족구성원 돌봄의 공식지원 가능성 확대)
- 지방분권화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도 지역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11) 의존성이 타인의 지시와 원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무능 상태를 강조하는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핍 상태라 한다면, 자립성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행위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행위의 방향 혹은 위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박혜미, 2014).

으로 함

보를루 계획(Plan Borloo)

- 프랑스 노동부 장관 존 보를루가 고용창출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준비한 “대인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계획안”
- 가정부, 정원사, 아이돌보기, 고령자를 위한 가사도우미, 컴퓨터 수리 출장서비스, 보충학습지도사 등 시급 8에서 10유로 정도의 단순노무직 노동자를 해당 직군에 포함
- 서비스 제공시 보수지급수단으로 포괄 고용서비스 수표(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CESU) 도입
- CESU는 가정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예:가사노동자)나 돌봄서비스업체에 지불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일종의 바우처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
- 2005년 『사회통합계획에 따른 대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인·근린서비스 수요 증가

- 프랑스는 91%의 노인이 집에서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대인·근린서비스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모델로 대두, 즉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과거 수요자 대상 ‘치료 중심 케어’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로 재편됨
- 이는 지방분권화와 함께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이기도 함

프랑스의 돌봄 정책의 과제

○ 노인·장애인서비스 재정 지원 확대

- 그간 노인·장애인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한정
- 재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 근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

○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케어 매니저”

- 노인·장애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가족, 친지, 이웃 등 비공식체계와 전문의, 일반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여러 분야 전문 인력들의 개입을 통해 제공
-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서의 비효율성, 비연속성, 중복 또는 단절 등의 문제 제기
- 다양한 직업군 간 역할 조율은 물론, 지역사회에 폭넓게 분산된 관련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전문화된 코디네이션 필요
-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 실버경제의 신기술 분야 간 칸막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

○ 사회복지의 피라미드 구조 극복, 수평적 재구성 필요

- 프랑스의 보건의료·사회복지는 오랫동안 피라미드 구조: 의사를 정점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이 배치되고, 그 아래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 치료사 생활보조원 등이 배치된 위계적 구조를 유지해 옴

-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대인·근린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은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평적 팀 구성을 필요로 함

○ 2019년 사회보험법 개정: “5번째 위험” 명문화 예정

-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가족수당, 실업보험,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4대 기둥을 기본구조로 함
-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독립가구에 대한 서비스 수요 급증, ‘독립성’과 관련한 새로운 사회보험 형태의 부양정책 개혁 논의
- 재원조달 방안: ①기업, ②근로자, ③은퇴자, ④국공휴일 중 하루 근로, ⑤민간보험에 세금 부과하는 등 5대 재원 마련, 사회연대로 난국을 돌파하자는 제안
- 기술적 측면에서 파리는 주거시설의 현대화(오래된 건물의 승강기 설치 등)가 재가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도 절실한 상황. 개정된 사회보험법은 특히 실버경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여 재가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기여한다는 방침

프랑스의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은 근로자와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과 일반사회분담금으로 충당되며 사회복지와 가족연금분담금징수연합(URSSAF)에서 재정징수와 관리를 담당함
- 사회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서비스 이행을 위임받았으며 민법상의 규제를 받는 사법상의 기구임.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가 징수하는 직접세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용되지도 않음

○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창구제” 제안

-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 필요
- 공공기관 등 한 장소에서 가족(영유아, 장애인, 노인, 부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단일 창구 제안
- 프랑스 대인·근린서비스기업연합회는 이에 대한 접근 전략으로 퀘벡 주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음

캐나다 퀘벡 주의 단일창구제

- 2003년 보건사회부가 설립한 건강통합센터 네트워크(University Integrated Health Network, RUIS)로, 맥길 대학, 몬트리올 대학, 세르브루크 대학, 라발 대학 등 4개 주요 대학의 전문 의료, 의학 교육 및 연구 촉진
- 2015년 2월 국회, 사회서비스네트워크의 조직과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지역서비스네트워크(RTS)의 핵심인 건강 및 사회서비스의 대다수를 통합 건강 및 사회서비스센터(CIUSS) 또는 대학 보건 및 사회서비스센터(CIUSSS)에 통합
- 지역의 모든 RUIS는 각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센터, CIUSSS 및 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해야 함

□ 시사점

○ 민간의 정책 기능 강화

- 연합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공공당국에 적극적으로 정책 및 제도를 제안
- 특히 2018년 생애주기별 재가서비스계획을 수립, 정책의 우선순위와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관련 연합회나 중간지원조직 등 민간의 대표기구 역시 체계적인 연구 및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민원이나 제도 개선을 넘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공동생산의 주체로서 정책 활동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연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연합회는 돌봄 분야의 대표적인 연합체로 회원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어소시에이션과 일반기업 등 관련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이는 프랑스의 오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어소시에이션의 발달), 프랑스가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오직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기실 사회적경제는 개인과 조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함께 조달하는 사회연대경제 활동이라 할 것임
- 즉, 지역사회에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자영업 및 일반 기업)의 참여가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연대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
- 이는 민간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창업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주민 조직(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코디네이션 모델 개발

- 프랑스의 돌봄 정책이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포괄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실버경제 기술 분야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 구상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임
- 단순한 전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의 주요 기관과 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포괄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로 고민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함
- 이를 위해 돌봄 당사자와 돌봄 가족,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당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돌봄 사업의 근본적 개념에는 본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체로서의 인식과 이웃과 함께 상호부조하는 연대의 경제가 자리 잡고 있음. 커뮤니티케어가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영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보영, 2018,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월간 복지동향 2018년 8월호
- 박혜미, 2015, 재가노인의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조정·연계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APA)와 지역노인전문코디네이션센터(CLIC)를 중심으로
- 박혜미, 2016, 프랑스의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 분석 :APA와 PCH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2018,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 복지국가연구센터, 2018, “프랑스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정책 개혁” 세미나 내용(2018.6.18.)
- 이은주, 2013, 사회연대성 확대의 측면에서 본 프랑스부양노인정책의 전개와 함의. 보건과 사회과학, 33,5-28.
- 임성근, 2012,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주프랑스대사관, 201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동향
- 한국법제연구원, 2015, 프랑스의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제-실시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년《보건사회연구》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2018, 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별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8,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과의 소통,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8,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일본의 사례와 한국형 모델,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자료집
- <http://www.welfarestate.re.kr/seminar/4261>
- <https://www.fedesap.org>
-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10/contents/con25.php
- <https://www.quebec.ca/en/health/health-system-and-services/service-organization/cisss-and-ciuss/>



기관 개요

-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는 1988년 결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 프랑스에서 저소득층 비중(빈곤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선지역 1,200여 개 중 320개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133개의 지역관리기업이 있음(2018년 통계)
 - 도시지역 11개, 고립되고 소외된 농촌지역 15개, 농촌지역 6개가 지역관리기업 설립 준비 중
 - ※ 2000년 말부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피폐화된 농촌 지역에서도 지역관리기업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지역관리기업에는 매년 총 9,000명의 인원이 고용되며, 그 중 상근직이 5,000명임. 자원봉사자는 2,500명에 달함
- 전국 지역관리기업의 총 매출은 1억 유로(1,300억 원) 규모이고 1억 4천만 유로는 급여로 지급되고 있음(노동통합지원금 등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서 급여가 매출보다 크게 나옴)

주요 내용

지역관리기업의 역사

- 1970년대 말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 북쪽지역인 루베 시에서 주민의 삶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하였음
- 거리·공원 청소, 집수리, 페인트칠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역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들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제공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생에 기여하는 한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
- 초기 지역관리기업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경영(auto-gestion)이라는 모토를 내세웠음
- 이후 지역관리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주민이 주축이 되지만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공공임대주택업자, 사회단체 등)가 함께 하는 지역개발 및 관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강조되면서 공동경영(co-gestion) 체제로 전환함
 - 이러한 운영원칙의 변화에 따라 지역관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주민, 사회단체, 지자체, 기업, 노동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 지자체나 공공임대주택업체들과 계약을 맺

은 지역관리기업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활동에 의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주민이 서비스의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수혜자)가 되는 것임

※ 지역관리기업을 지칭하는 '레지 드 카르티에(Regie de Quartier)'는 원래 모든 배우를 무대 위에 올리는 연극 용어에서 유래한 것임. 지역 당사자 모두가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의미

○ 1998년 '반소외법' 제정 이후 제도적으로 인정된 지역관리기업은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에 근거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연대기업(ESUS)'이라는 인증을 받고 있음

- 연대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노동통합 관련 지원금, 낙후지역 우선 창업지원금, 연대금융 투자자(연대임금기금 등)등 각종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음

지역관리기업 주요 목표: 지역사회 변화와 일자리 창출

○ 정치적, 정책적 프로젝트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바꿔냄.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공유재라고 정의한다면, 프랑스에서는 지역관리기업을 '공유재' 라고 보는 견해

① 경제적 목표

- 낙후된 지역, 실업을 높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것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임
- 주민 거주 지역에서 시설 관리, 건물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재생과 관련된 일을 통해 일자리 창출함
- 지역관리 기업 유무에 따라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도가 달라짐

② 사회적 목표: 사회적 관계 복원

-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를 연대적으로 해결함
- 교통문제(마을버스)해결을 위해 운전교육을 하고 주민 관계형성을 위한 카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주는 활동을 함
- 모든 프로젝트는 지역의 욕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동기획 및 생산함
- 지역의 욕구를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함

③ 시민적 목표

- 주민은 프로젝트의 심장이고 중심이며, 지역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함
- 주거지에 기반하여 주민이 일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적용함으로써 시민권 행사
-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직업·시민교육 진행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의 주요 사업

○ 네트워크에서는 지역관리기업 라벨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

한도 행사하지 않음

- 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 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
 - 매년 5,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음
 - 직무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함께 시민의식 등 사회적 교육 과정도 운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관리기업의 주된 성과
- 홍보 서비스: 설립 안내서, 세금, 중재, 공공시장 등에 대한 주제별 안내서, 신문, 우편물, 연간3회 발행되는 '네트워크 정보' 소식지 등 제공
- 정부와 협상: 세금,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하고 전체 지역관리기업의 입장을 대변
- 회원기업의 만남의 장: 3~4년에 한 번씩 전국 회원들이 만나는 행사 및 포럼 조직
- 비공식적 모임: 공동의 실천과 가치 및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자치단체장과 일하는 법, 시장을 개척하는 법,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지역관리기업 인증과정: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프로세스

- 대부분 지역관리기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주민 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됨. 최근에는 지역관리기업 10곳 중 8~9곳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설립되고 있음
 -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네트워크에 협조 요청을 하면, 네트워크에서는 관련 파트너들을 협의 테이블에 모이게 하는 등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 과정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요청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 뒤 1단계: 사업 지역 설정하기 → 2단계: 거버넌스 구조 만들기 → 3단계: 주요 사업 우선순위 정하기 순으로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공동의 제화 추진
 - 직원 모집, 사무실 구하기, 사업계획 및 수익모델 수립 등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구체화하는 논의 진행
- 지역관리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회주택업체 등과의 협상 테이블이 중요함
 - 지자체의 노동통합 일자리사업, 공원녹지관리사업,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등과 사회주택업체의 아파트 주거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역관리기업이 위탁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최소한 60만 유로(약 8억 원) 규모의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서류들이 모두 작성되면 전국네트워크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감사하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역관리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함
 -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하는데 총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지역관리기업 조직

- 공동경영이라는 철학에 따라 주민, 지자체, (사회)주택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보통 16명-20명임(지역의 사회경제 파트너들도 참여 가능)
 - 지역 주체를 대표하는 4개 범주로 구성: 주민(7~9명), 지자체(3~4명), 공동주택업체(2~3명), 지역의 사회·경제기관 파트너(4~5명)
 - 대부분 주민 중에서 이사장이 선출됨(지역관리기업의 83%에 해당)
 - 투표권은 구성 범주에 따른 정책을 적용해 비율이 상이함: 주민은 100%, 주택업체는 63%, 지자체는 87%, 사회경제기관 파트너는 92% 인정
- 지역관리기업 당 평균 38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음. 이 중 24명 정도는 노동통합, 교육/직업 훈련 등의 과정에 있는 주민들임

지역관리기업의 사업 분야

- 지역관리기업의 사업 분야는 통칭 근린 도시 관리(gestion urbaine de proximite)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관리기업이 평균 5~6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복합 사업성은 규범화되었음. 또한 75%의 지역관리기업이 지난 3년간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였다는 것은 지역관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보여주는 것임
 - 사업분야: 외부 공간 보수 관리,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 재활용, 건물 유지보수, 공용 정원, 주차장, 목공소, 중재, 대인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등
- 지역관리기업 당 평균 연간 예산은 132만 유로(60%는 매출, 40%는 보조금), 평균 매출은 73만 유로, 임금 총액은 103만 유로(38명 상근직 기준)

금융지원

- 지역관리기업 설립 시 초기 자금은 지역금융기관 및 단체를 통해 직접 해결하고 있고 전국네트워크가 개입하지 않음
- 수익구조를 보면 사회주택업체 40%, 지자체 37%, 관련기업 또는 민간단체 17%, 주민 5%
 - 사회책임조달, 노동통합 관련 위탁사업 등 공공조달은 지역관리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평균 매출의 77%가 지자체, 사회주택업체(공공임대주택기관)와의 계약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들이 지역관리기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함

당면 과제

- 네트워크의 전문성 강화: 지역관리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확장하면서 직원, 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유지 강화가 필요함

- 규모가 큰 지역관리기업은 1억~5억 유로의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 비중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목적과 근린서비스(근접성)와의 균형 유지가 과제
- 지역관리기업은 지자체 정책결정자 및 사회주택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들과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존재함
- 특히, 청소업체, 일반기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과 일방적 관계의 극복, 지역 생산, 수평적 관계 및 민주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 난항
- 마크롱 정부에서 노동통합 등의 공공조달 계약이 줄고 프로젝트 지원과 금융지원이 감소 중
- 지역관리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교체로 인한 공공조달시장의 축소 또는 지역관리 기업 자체 경영능력 한계가 대부분

파리 10구 지역관리기업 “운하의 집”

- 파리 10구 그랑쥐오벨 구역의 저소득층 거주 5,000명
- 10년의 업력으로 30명의 직원이 있음(행정담당 10명, 현장 담당 20명)
- 사업 영역
 - 공동주택 공용공간 유지 보수, 계단 및 건물 앞 청소, 쓰레기통 배출 및 수거
 - 직원들이 주민과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가교 역할 함.
 - 10세~16세 대상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 야외 수업 활동
 - 임대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주민교류 활동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 재활용품 공유 등의 순환경제활동
 - 5~6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동사업 진행 (식당 운영, 푸드뱅크, 텃밭 운영 등)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지역정책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의 의무

- 사회연대경제는 주변적인 경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
 - 지역¹²⁾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연대경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구체화
 - ※ 지방(도)에서는 도 발전계획(Plan Regional de Developpement de l'ESS),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역발전계획(Plan Metropolitaine de Developpement de l'ESS), 기초지자체에서는 기초시군구발전계획(Plan Local de Developpement de l'ESS)을 수립
- 「2015-2020년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전략」의 다섯 가지 핵심 축을 규정하여 광역·기초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시
 - ① 지원과 금융: 창업 및 성장지원, 기존 금융수단과 연계 및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 개발
 - ② 지역 활성화: 지역정책 및 사업계획,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③ R&D와 혁신: 성장 변화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혁신 방안 모색, 공익협동조합 창립 지원
 - ④ 인식 확대와 교육 및 홍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다양한 형태 홍보, 공공조달에서 우대
 - ⑤ 고용과 인력 양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고용의 질 보장과 전략적 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

- 사회연대경제법에 근거해 사회연대경제 지역전략 수립을 위한 파트너십의 구성 및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
- 민간파트너인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RESS)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연대경제 기업인 지역연합 등으로 구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연대경제 협의체
 -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는 공적유용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로 전국에 26개 회의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부문)의 이해를 대변하는 고유 임무를 넘어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조직)들을 결집시키고 사회연대경제의 촉진 및 발전을 총괄 지원
 - ※ 1969년 일드프랑스지역에 첫 지역회의소가 설립된 후 1970년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 연대경제의 부상과 함께 규모가 더욱 확대
 - 지역회의소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기업의 임원 및 직원 교육 지원, 사회연

12) 프랑스의 지역행정은 36,570개의 코뮌(commune-시군), 96개의 데파르트망(departement-여러 개의 시군이 모인 광역), 22개의 레지옹(region-여러 개의 광역이 모인 지방), 세 단위로 구분됨. 모든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선출직으로 지방자치 행정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국방/재난관리/안전 업무를 수행

대경제 기업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 목록 작성 및 자료 출간, 민간 대표로서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 역할 수행

지역정책 공동생산 과정 체계화

- 사회연대경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은 2년마다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 개최가 의무화되어 지역회의소(CRESS) 구성원,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지역네트워크,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 대표들, 관련 사회 협력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 수단, 지역정책의 성과, 지역정책 개발 제안, 규모의 경제와 사업협력 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일반기업 간 관계 형성,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연대기업 인가 교부에 대한 평가 등 논의
- 또한 지역회의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국제화, 기업의 혁신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방향을 규정한 「경제 발전과 혁신, 국제화 지역전략(SRDEII)」에 반영할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을 논의함

주요 내용

렌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 프랑스 행정체계 상 경제정책은 시 행정의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음. 광역시는 최근에 개편된 행정체계에 따른 새로운 조직으로 “렌 광역시”는 렌을 중심으로 인근 43개의 시가 모인 것임
- 현재는 광역시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렌시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왔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동통합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음. 특히, 공공구매정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협약을 추진함
- 2014년에 사회연대경제법이 제정된 후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 중심의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함
 -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 주로 디지털, 정보, 자동차 등의 지역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중심에 둔 전통적 경제발전정책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원을 포괄한 경제정책의 흐름 정착
- 렌 광역시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약 2만 5천개 규모로 전체 기업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14%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매해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40세 이상의 일반 기업 경력을 가진 중년층에서의 창업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임
-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만들고, 신규 사회연대경제 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 시행 중

- 렌시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모든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소비, 공공구매, 상업, 교육, 경제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수평적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공간지원 정책

- 최근 지원정책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필요한 상가나 건물을 시내에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의 도시재생과 상업발전계획에 사회연대조직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중
 - 도시 기반행정부서와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내 유휴공간 및 유휴부지를 맵핑하고, 이를 도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보통 민관이 합작 투자한 회사)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수요와 매칭하는 전략 수립
 - 또한, 렌 광역시 출연 공기업이 경제발전전략을 실행하면서 재생이 필요한 상가 등을 매입한 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함. 현재 렌시 남쪽에 5,000m²의 공간을 매입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입주시키는 프로젝트 계획 중
 - 입주자격은 사회연대경제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임. 시가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
- 아직 계획 단계라 기존 소상공인의 마찰은 없지만, 도심지역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렌시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하면서 기존 영리단체(시설)과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공익을 위한 경제활동에 관한 기업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영역을 보호한 사례가 있음
 - ※ 가령, ‘부모들이 움직인다(Les parents bougent)’라는 품앗이 어린이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 지역에서 필요를 느끼는 부모들이 자생적으로 시작하다가 행정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규모도 커지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도 해결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저출산 문제 대응 정책

- 프랑스 출산율이 유럽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 특히 렌과 낭트 지역이 가장 높는데, 부족한 학교 시설을 신설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어린이 돌봄 단체와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으며, 가족수당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실업 관련 정책 현황

- 프랑스 역시 실업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가?’가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지표임. 렌시는 현재 실업률이 8% 정도로 낮은 수준임

- 프랑스는 고용지표 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들을 포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부모들이 움직인다’ 같은 단체를 지원할 때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단순 고용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에서는 3세대가 실업을 경험하는 가정도 있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가정인데, 노동통합기업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의 경우 자활 비용으로 1년에 2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역 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협동조합에 2만 유로를 지급하여 실업자가 일을 배울 수 있게 함. 이는 행정이 나서서 협동조합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인데, 행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됨
-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① 고용의 문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와 자존감을 확보하게 하고, ②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며, ③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기관 개요

- 2002년에 결성된 100여 개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주축이 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촉진, 국가와 유럽연합에 지역사회연대경제 대변, 좋은 실천 사례 공유와 확산, 사회연대경제 정책 구현을 위한 조건과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공공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및 사례를 개발하고 확산에 주력
- 지역파트너십 구축(민/관/정), 시민 참여 기반과 민주적 실천, 자원혼합(민/관, 영리/비영리, 화폐/비화폐), 네트워크 형성(지역, 전국, 국제적 경험) 등 네 가지 원칙에 기초한 지역발전 추구
- 주요활동
 - ① 회원들의 활동과 정책 홍보, ② 년1회 회합, 지역 및 지역 간 정기적인 교류, ③ 관련법, 시행령, 기본계획, 공공정책 등에 대한 논의, ④ 월 뉴스레터와 분기별 소식지 발행, 주제별 책자 발간 등 정보공유, ⑤ 공공조달, 순환경제 등 현안 관련 웹 컨퍼런스 조직 및 교육
- 연회비는 주민 수에 따라 책정
 - 기초시·군·구/시군구 연합: 최소 만명 미만 180유로~최대 500만 이상 9600유로
 - 데파르트망(여러 개의 시군이 모인 광역): 최소 30만 미만 2000유로~100만 이상 3600유로
 - 레지옹(여러 개의 광역이 모인 지방): 최소 30만 미만 2500유로~최대 500만 이상 9600유로

주요 내용

정책 개발 및 협력

- 국가 및 유럽연합 단위 정책 개발, 국제 협력 관계 구축
- 지역/국가 단위의 사회연대경제협의체, 공익협동조합 등과 협력
-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정책 개발에 집중

연구 및 교육 활동

- 관련 연구 아카이브 구축, 출판, 뉴스레터 발송
- 최근 연구 과제: 유럽 & 사회연대경제 발간, 사회연대경제 도시정책 연구 중
- 관련 단체 미팅 주선, 회원에게 교육 제공
- 주요 교육 분야: 지속가능한 먹거리, 모빌리티, 공공구매, 친환경 건축, 공공정책의 협력 등

① 저개발·소외 지역에 대한 연구

- 실업률이 높거나 쇠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 협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기반으로 3년 정도 진행, 최근 10개 저개발 도시에 대한 조사 연구 착수
- 기존 교통 및 인프라 개발 중심의 지역 개발 정책의 한계 인식
- 사회연대경제 정책, 사회관계망 회복, 사회자본 축적, 교육 및 돌봄 분야 정책, 사회주택 정책 연구
- 지속가능한 먹거리, 모빌리티(공유차 등), 지역거점기업, 공동체토지신탁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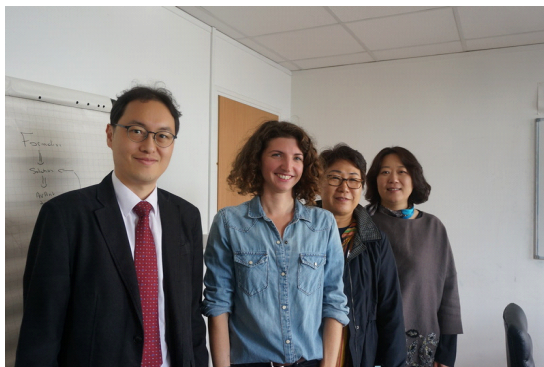
② 농촌 지역 사회연대경제 연구

- AVISE, 전국사회연대경제 민간단체, 도지사협의회와 협력
- 통계 자료 업데이트 및 최근 사회연대경제 현황 분석
- 각 지자체의 농촌 정책 연구
- 교육, 의료, 돌봄 분야의 공공정책 유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역할 모색

③ 고령화 관련 프로젝트

- 현재 시작 단계로 실버경제에 대한 단기 교육 진행

* 정권 교체에 따른 변수: 마크롱 정부 이후 사회당과 연관 등으로 탈퇴한 지방정부가 있었으나 민과 협력 연계가 있어서 상당수가 남아있음. 초기에는 주로 녹색당이 집권한 지역들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정당에 관계없이 참여하고 있음



관련 기사

매체명	기사명	게재일
세모편지	“도시-지역 간 연대.협력 글로벌 구심점” 2014-2018 GSEF를 말하다	2018.10.8
한겨레	[세상읽기] ‘모방국가’의 종말	2018.10.9
한겨레	30년 역사의 스페인 노동자협동조합 GSD에서 배우는 교훈	2018.11.19
세모편지	한발 앞선 유럽 사회연대경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까	2018.12.4
한겨레	[세상읽기] 도시, 재생과 전환 사이	2018.12.4

주요 사례

한겨레 30년 역사의 스페인 노동자협동조합 GSD에서 배우는 교훈 [HERI의 눈] 1985년 마드리드에서 교사 중상대 설립 사회적으로 소유-운영되는 대표 사례 지역 평생학습 시설로서의 가치도 충분 우리나라도 협동조합학교 움직임 싹터  스페인적 노동자협동조합 GSD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배우는 협동학습을 중요시한다. 학교 밖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HERI의 눈 시민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다. 물론 시민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한겨레 [세상 읽기] 도시, 재생과 전환 사이 / 이원재 이원재 LAB2050 대표 강항 읍내는 울씨년스러웠다. ‘음식문화특화거리’에는 손님이 드물었다. 버려진 빈 가게 터도 눈에 띄었다. 간판들은 낡아가고 있었다. 5분 거리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관람객이 가득 차 있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10여년 전, 충남 서천군에서 진행하는 ‘강항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깃발을 마련하고 공단을 짓는 대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을 지역에 유치하기로 결정한 시점이었다. 강항은 1930년대 계천소가 들어서고 1960년대 국제항이 열려 서해안 최대 산업도시가 됐던 곳이다. 그 모든 산업기반이 떠난 뒤 인구도 역동성도 포그라든 이곳을 재부흥하자는 야심 찬 기획이었다. 지역 연구자, 음식 전문가, 행정 관료들이 모여 새로운 도약을 꾀하는 전략을 연구했다. 생태, 연구, 관광이라는 열외말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쳐나갔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역 재포지셔닝 전략이 나왔다. ‘도시재생’이 법제화되기 전의 도시재생 기획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그 결과는 외면이다. LAB2050이 최근 지역별 제조업 고용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를 보다가, 그때를 다시 떠올려 성찰하게 됐다. 많은 지역이 규모와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강항읍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보였다. 그런 과정을 강항보다 더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겨레 [세상 읽기] ‘모방국가’의 종말 / 이원재 이원재 LAB2050 대표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스페인 발표자가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국제사회경제포럼(GSEF)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빌바오에 도착했다. 그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 옆 강가를 걷고 또 걸었다. 제조업 몰락 이후 옛 조선소 터, 철도 부지가 미술관과 공원으로 변모한 아름다운 강가다. ‘빌바오 모델’은 전세계에 탈산업도시 전환의 모범적 사례로 알려졌다. 많은 이가 ‘배우겠다’며 찾아갔다. 수많은 한국인이 거기에 포함된다. 건축가들은 구겐하임 미술관과 도시 미관을, 공무원들은 도시혁신 과정을,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협동조합과 시민 참여 전통을 배우겠다고 그곳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빌바오는 완벽한 성공 모델일까? 여러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겐하임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었을까? 아름다운 강가를 싹쓸이 비껴가 걷다 보면, 곧 빈민가가 나타난다. 빌바오의 빈곤인구는 2000년 이래 33%가 늘었다. 철도가던 산업도시 시대 공장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빌바오의 실업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5%에 육박한다.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 또는 불안정한 노동자로 여성
한겨레 [HERI의 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0878.html	한겨레 사설.칼럼 ‘도시, 재생과 전환 사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037.html	한겨레 사설.칼럼 ‘모방국가의 종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5125.html

○ 기사 원문

세모편지, SE기획

“도시-지역 간 연대·협력 글로벌 구심점” 2014-2018 GSEF를 말한다(2018.10.8.)

“도시-지역 간 연대·협력 글로벌 구심점”... 2014-2018 GSEF를 말한다

SE 기획

2018/10/08 10:47

<http://blog.naver.com/sehub/221373211837>



사회적경제 국제네트워킹 플랫폼, 서울시 주도로 세계 최대 협의체로 성장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도시정부 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페인 빌바오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 3차 총회’에 참석해 뉴욕, 마드리드, 빌바오 등 전 세계 80여 개국 1,700여 명의 도시정부 대표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1일 빌바오에서 열린 'GSEF 2018'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제공)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이다. 2018년 9월 기준 43개의 지방정부와 Chantier(퀘벡 사회적경제협의체), RIPESS(대륙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IFSSE(사회연대경제 국제포럼), Locality(영국 지역공동체 연합 네트워크), AVPN(아시아 지역 내 벤처 사회투자,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등 대표적인 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201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2차 총회(66개국 1,500여 명 참석)의 성공 개최에 이어 올해는 빌바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출범 5년째를 맞이한 GSEF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하기까지 달려온 길과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GSEF 빌바오 2018] 80여개국 1,700여명 한목소리 "99:1 불평등사회 사회적경제로 해법 찾자"

올해 GSEF 총회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회적경제와 도시'를 주제로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렸다.

빌바오는 1970년대 이후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쇠퇴한 공업도시였다. 지역재생사업으로 화려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도시로 평가받으면서 이번 GSEF 개최지로 선정됐다. 특히 빌바오가 속한 스페인 바스크 지방은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도 유명하다. 후안마리 아부르토 빌바오 시장은 개회식에서 "쇠퇴했던 철강업 도시 빌바오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일구고 여러 협동조합을 통해 여성, 장애인 등이 함께 성장하며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경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시민들을 위한 대안적인 성장과 고립되지 않는 시민

행복을 위한 연대의 길에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참가자들은 불평등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사진. 서울시 제공)

올해 총회에서는 99:1의 불평등사회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가치가 담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치와 경쟁력은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되었다. 바스크 사회적경제연합회의 로사 라빈 회장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를 많이 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형태를 만들겠다"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더 포용적인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 전체 세션에서는 지난 6년 간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울 경제에 안착 중인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일반 시중에서 대출이 어려운 196개 사회적기업에 장기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물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도 운영 등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새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4.3배(882개→3,832개), 일자리는 1.7배(10,400명→17,400명), 공공구매는 2.3배(500억 원→1,157억 원)로 각각 성장했다.

또한 포럼 기간 서울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빌바오시와 '우호도시협정'을 맺고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다.

[GSEF 몬트리올 2016] '사회연대경제' 강조, C.I.T.I.E.S 출범 약속

'GSEF 2016' 총회는 2016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대륙, 국가 중심이 아닌 ‘시’ 중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녹색 굴목, 기후 변화 등의 환경문제나 저소득층 주거, 가난한 예술인 지원 등의 빈곤문제처럼 몬트리올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 GSEF 2016의 공동주최자인 드니 코데르(Denis Coderre) 몬트리올 시장



2016 행사에서 논의되어 선포한 '2016 몬트리올 선언문'에서는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가 강조됐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와 사회, 도시 발전을 위한 운영에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사회적기업 등 시민 중심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개발 모델이다.

또한 서울시와 몬트리올시, 몬드라곤시는 이 총회에서 각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심기구인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섹터 간 전수를 위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Transfert Intersectoriel e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약칭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의 출범을 약속했다. C.I.T.I.E.S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모범사례와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지방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GSEF의 실행력을 높여주는 단체로 본사는 몬트리올에 설립되었다.

[GSEF 2014] GSEF 현장 채택, 서울시 의장도시로 선정

13개국 18개 도시, 18개국 43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GSEF 2014'는 세계적 위기 및 지역사회 문제를 국제협력으로 푸는 데 거점이 될 사회적경제 국제기구 창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포럼이었다. 초대 의장 도시로 서울이 선정되는 것은 물론, GSEF 2013에서 발표한 서울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한 'GSEF 현장'을 채택하며 협의체를 발족했다. 'GSEF 현장'은 총 5장 11항으로 구성되어 GSEF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미션과 목표, 회원규정, 조직구조, 재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현장에는 지역의 문제 그리고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은 지역 간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이 우선이며 그 협력의 주요 전략은 사회적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전세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임이 현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GSEF 2013] 사회적경제 및 지방정부 주체들 한자리에 모여 창립 결의 '서울선언문' 발표

GSEF 출범의 포문을 연 첫 행사는 2013년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시민청 등에서 국내외 130여개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서울·볼로냐·퀘벡 등 8개 도시와 상티에·로컬리티·그룹 SOS 등 9개 민간단체가 함께 작성한 '서울선언'이 채택되면서 창립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었다. 서울선언에서는 현재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시작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10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포럼에서는 우호적 협력 협정과 협업사업 제안이 이루어져 국제적인 민관협력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상호 경험 및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우호적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또한 캐나다 퀘벡의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인 '상티에', 연구기관인 콩고디아 대학 '칼폴라니연구소'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13-2018 GSEF가 걸어온 길〉

개최 행사	일시	장소	주요내용
GSEF 2013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2013.11.5.~11.7.	서울	- 서울선언문 발표 - 볼로냐 상티에-칼폴라니연구소 MOU 체결 - 초대 의장도시 선출
GSEF 2014 (GSEF 창립총회)	2014.11.17.~11.19.	서울	- GSEF 현장 채택 - 차기 개최도시 선정 - GSEF 사무국 서울 유치 - 몬트리올 선언문 발표
GSEF 2016 (몬트리올 포럼-총회)	2016.9.6.~9.8.	몬트리올	- CITIES(사회연대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 창립 결의 - 의장도시 연임 결정 - 차기 개최도시 선정

아시아 정책대화 2017	2017.7.1.	서울	- 주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시아 사회적 정책 디자인'
아시아 정책대화 2018	2018.7.6	서울	- 주제 '도시와 사회적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강화'
GSEF 2018 (빌바오 포럼-총회)	2018.10.1.~10.3.	빌바오	- 차기 개최도시 선정 -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및 빌바오시와 '우호도시협정' 체결

“서울시,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서 역할해 나갈 것”

의장도시를 역임하는 등 서울시가 창설을 주도해 성장해오면서 출범 5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안착한 GSEF 차기 총회는 2년 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 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과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GSEF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창립 이후 GSEF는 사회적경제 관련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들을 연구하고 공유·협력해 왔다. 이제는 GSEF가 단순 협의체를 넘어 도시 간·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글로벌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보다 많은 도시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거듭나도록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글. 라현윤(이로운넷 기자)

〈세모편지〉 구독하기 <http://goo.gl/xzKSWN>

○ 기사 원문

세모편지, SE기획

‘한발 앞선 유럽 사회연대경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까’(2018.12.4.)

한발 앞선 유럽 사회연대경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까

SE 기획

2018/12/04 17:03

<http://blog.naver.com/sehub/221412254154>



GSEF 3차 포럼 '스페인·프랑스 전략기획 연수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주제로 금융·지역·돌봄·노동 등 논의



11월 29일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기획 연수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유럽에서 개최한 첫 번째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자, 한발 늦게 사회적경제를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한 장이었다.

-로렌스곽 GSEF 사무국장

지난 10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GSEF) 3차 포럼'에 대한 평이다. GSEF는 세계 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GSEF에 참여하고 스페인, 프랑스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돌아보고 온 단원들이 연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기획 연수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혁신, 거버넌스, 금융, 지역재생, 돌봄, 노동, 청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버넌스·정책·금융 △지역관리·돌봄 △일자리와 미래세대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 국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논의 등이 이어졌다.

유럽 사회연대경제(SSE), 자본주의 '경제 불균형' 해소 역할



인성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 김유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대표(왼쪽부터)가 스페인,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거버넌스·정책·금융' 섹션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소개됐다. 바르셀로나는 인구 160만 명으로 서울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은 5,000개로 바르셀로나 전체 기업의 3%를 차지하며, 5만 3000명 고용, 37억 유로(4조 7,000억원) 매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성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은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SSE)'라고 표현한다"며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했을 때 자발적으로 SSE 조직을 만들어 필요를 충족하고, 정부에서는 공공정책을 통해 SSE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국가로, 바르셀로나에서는 특히 '주거빈민' 문제가 심각했다. 주거빈민 운동을 하던 활동가 아다 킬라우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바르셀로나는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경제를 가동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SSE를 통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다원적 경제'를 추구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지구·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및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시 의회, 공무원, 지원기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거버넌스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공자산의 20%를 인증받은 윤리적 은행에 예치해 SSE에 자본을 제공하고, SSE 새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피아레&콥57(Fiare&Coop57)' 등도

시사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아비즈는 SSE, 사회적기업, 노동통합기업, 사회혁신지원,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보급 등 5대 분야를 지원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SSE, 사회혁신 지원 조직으로는 '아비즈(AVISE)'가 소개됐다. 1901년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아비즈는 SSE, 사회적기업, 노동통합기업, 사회혁신지원, 사회적 임팩트 평가와 보급 등 5대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노동통합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지역동반프로그램(DLA)'도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유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은 "지역과 주민 욕구에 최적화하도록 정교하게 코디네이션하는 '지역동반프로그램(DLA)'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는 '사회혁신관리' 등을 배울 만하다"며 "프랑스는 오랜 역사의 사회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금융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비결도 공유됐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및 조직으로는 '90/10펀드', '파이낸솔(Finansol)', '연대투자', '공유저축', '악티브(Active)' 등이 있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식회사 대표는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큰 한계인데, 국가와 민간이 주도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에서는 국민이 직접 금융기관 상품을 사고 그 돈이 기관이 흘러가게 하며, 국가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민과 기업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수단 아닌 주민 참여의 장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지역관리기업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쿠폴리스', 파리의 '레그랑브아장', '운하의 집' 등이 있다. 두 번째 '지역관리·돌봄' 섹션에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역관리기업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쿠폴리스', 파리의 '레그랑브아장', '운하의 집'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 지역관리기업이란 도시 운영을 위한 도구로서 민주적 운영 능력, 지역적 성격, 정치적 역할,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연대체로 활동한다.

강명신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공동대표는 "지역관리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및 거버넌스, 지역관리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프로세스 등을 국내에 적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돌봄 사례로는 대안·근린 서비스 연합 '페데삽(Fédésap)'이 소개됐다. 페데삽은 회원기업 1,600개, 종사자 6만 5,000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잘사는 나라' '개방된 공간에서 세대 간, 세대 내 함께 잘사는 것' 등을 추구한다. 프랑스의 돌봄 제도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며 의존성에서 독립성, 재정 건전성 확보에서 서비스 이용의 다변화 및 선택권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민행 서울지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페데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료집을 만들어 공공 당국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데, 국내 돌봄 조직들 역시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한국은 사회적경제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공유하는 모든 주민들

의 참여가 기본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일자리·교육 문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책 제시



노동통합기업연합 쿠라스는 실업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 ‘일자리와 미래세대’ 섹션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Les Scop)에는 2만 2,517개 기업이 속해 있으며, 농업, 상업, 소비자, 수공업, 학교 등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익 협동조합 SCIC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고용했다.

일례로 노동통합기업연합 쿠라스(Coorace) 사례가 공유됐는데, 실업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간접적으로 3,000개 단체가 협력해 실업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한 결과 14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찬희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은 “한국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돌파하는 등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이지만 실업 대책은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다”며 “프랑스처럼 실업을 심각한 단계의 구조적, 장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협동조합으로는 스페인의 GSD 사례가 소개됐다. GSD는 교사 중심의 노동자협동조합 학교로 스페인 내 8개 학교를 설립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만 5,000명 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2~3교대로 수업 시간을 운영해 학교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아침식사와 방과 후 활동은 물론 성인을 위한 학습 등도 제공한다.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은 “GSD는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협동조합 형식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최근 한국에서도 유치원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

데, 초중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에폴42는 비영리·무료 IT 전문 교육 기관으로, 18~30세 청년들이 입학해 그래픽, 프로그램, 웹,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세대를 위한 스페인의 '빌바오 혁신 공장(BBF)', 프랑스의 '에폴42' 사례도 발표됐다. BBF는 몬드라곤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대학), 창업지원(인큐베이팅), 성장지원(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빌바오 시는 학생, 창업가, 혁신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10년간 부지를 무상 제공했다.

에폴42는 비영리·무료 IT 전문 교육 기관으로, 18~30세 청년들이 입학해 그래픽, 프로그램, 웹,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의 강의나 교수가 없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3,000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고동현 재단법인 LAB2050 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영역은 물론 한국의 인재 양성에 관한 전반적 정책이 창업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으며 "에폴42처럼 실제 협력하는 능력이나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더욱이 에폴42는 교육 과정이 무료라 어떤 계층이든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위한 재교육이라는 점에서도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유럽의 사회연대 경제는 다원주의 경제 방식을 지향하면서 사회혁신을 매우

넓게 바라보며, 다양한 창업에 대한 도전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함께 역할 재분담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연대 촉진 구조'를 넘어 기금, 시민자산화 등 '물적 연대 기반'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체 연수 기관 소개 및 사업 내용을 결과보고 자료집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자료집은 파일 형태로 이달 중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양승희(이로UNET 기자)

사진. 이우기(사진가), 2018 사회적경제 해외연수단

〈세모편지〉 구독하기 <http://goo.gl/xzKSWN>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